

교과서연구

제 54 호

2008. 8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발행인 / 곽현수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김병규, 금융한, 김정호,
윤광원, 김종일, 홍후조,
권영민
- 편집협력위원(사·도 교육청)
김광화(서울), 전미순(부산),
권충현(대구), 최은아(인천),
권도연(광주), 최재천(대전),
이종문(울산), 김국희(경기),
고경식(강원), 정진구(충북),
이희원(충남), 홍진석(전북),
박광춘(전남), 이진관(경북),
김영범(경남), 양영선(제주)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8-2 세원빌딩 4층
- 홈페이지: www.ktrf.re.kr
- 전화: (02) 2651-1950
- 팩스: (02) 2651-1954
- E-mail: editor@ktrf.re.kr

- * 표지 글씨: 신두영
- * 편집·디자인: 대한교과서(주) 편집팀

● 권 두 언

- 2 _____ 교실 친화적 교육 정책의 방향 / 권재술

● 특별 기획: 국가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 4 _____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와 그 특징 / 김라경
11 _____ 기초 기본 교육의 중요성 / 김명숙
18 _____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 성열관
23 _____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방향 / 권영민
29 _____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며 / 홍후조
33 _____ 외국의 국가 교육과정 개선 동향 / 박순경
38 _____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 정책 / 김정호

● 현장 교육

- 43 _____ 부산광역시교육청 '맞춤 수업 2008' 프로그램 안내 / 허성만

● 논 단

- 48 _____ 교과서 발행 제도의 개방화와 자율화 / 이혜영

● 연 재

- 52 _____ 노르웨이의 교육과 교과서 제도 / 박옥경

● 나의 제언

- 56 _____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되어야 / 조현애
59 _____ 21세기형 교과서의 특징 / 진재관

● 교과서 편집자의 변

- 64 _____ 인내(忍耐)와 극기(克己)가 준 커다란 보람 / 류충현
67 _____ 교과서 그림 작업을 하면서 / 정대영

● 탐 방

- 70 _____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25)-윤진영 / 대학서림 회장

● 자 료

- 74 _____ 2007년도 연구 보고서 소개

- 76 _____ ● 연구재단 소식
78 _____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79 _____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80 _____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실 친화적 교육 정책의 방향



글 | 권재술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교실을, 사면이 벽으로 된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일어나는 장을 의미한다면, 교실은 교육의 목표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당연히 교실 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교실 친화적 교육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이러한 위기는 교육 정책, 교육 행정, 교원 양성, 그리고 교육 내용과 교재가 교실 친화적이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이 교실 친화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의 교육 정책이 교실 친화적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교육부(그 당시는 교과부가 아니고 교육부였음.)에서 개혁의 태풍이 불어도 교실에서는 미풍도 불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단적으로 그 개혁이 교실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나쁜 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모든 교육 개혁안은 그 안 자체로는 좋은 것이다. 문제는 안이 좋으나 아니냐가 아니라, 그 안이 교실 친화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이 되지 않고 구호로만 그치게 되는 것이다. 교실 친화적이지 못한 교육 개혁은 아무리 좋아도 성공하지 못한다.

교육 정책이 교실 친화적이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교육 행정이 교실 친화적이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장이나 교장을 주로 상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한 공문을 얼마나 신속히 잘 처리하느냐로 교육의 효과를 가늠하기 쉽다. 그러나 교육의 진정한 효과는 교실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들을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잘하는 선생님을 유능한 선생님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그러한 선생님들 중에는, 공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자습시키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선생님을 유능하다고 평가하거나, 선생님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다면 그 학교의 행정은 결코 교실 친화적이지 못한 것이다.

행정이 교실 친화적이기 위해서는 그 행정의 내용과 처리 과정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도와주

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실 친화적이지 못한 교육청이 좋은 교육청일 수 없고, 교실 친화적이지 못한 학교가 좋은 학교일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교원 양성이 교실 친화적이어야 한다.

거의 모든 교육의 문제는 결국 교사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교원 양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교실 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교원 양성은 정말로 교실 친화적인가? 현실은 그렇게 만족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우선 교원 양성 대학에서 여러 좋은 교수 방법을 배운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교수법이 교사가 되었을 때 교실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 교원 양성은 교실 친화적인 교원 양성이 되지 못한다. 만약 현재의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교실 친화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원 양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고쳐야 한다.

넷째, 교원 연수가 교실 친화적이어야 한다.

교원 연수가 교실 친화적이기 위해서는 연수에서 배운 것을 바로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수는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운 것을 교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새로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에서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끝나고, 교실에 돌아가면 연수받기 전에 하던 방법대로 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교실 친화적인 연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재가 교실 친화적이어야 한다.

교과서를 포함한 교육용 교재에 있는 내용은 물론 재료나 실험 장치가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거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면 결국 학교 현장에서는 외면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개발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으로 제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 보고, 만든 것을 교실에서 학생이 사용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하여 보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다. 교실 친화적이지 못한 교재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말한 것 같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당연한 것을 당연히 실천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 당연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이 난국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교실 친화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하자는 것이다. 교육 정책이 교실 친화적이어야 하고, 교육 행정이 교실 친화적이어야 하고, 교원 양성이 교실 친화적이어야 하고, 교육 내용과 교재가 교실 친화적이 되면 학교 교육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내 주위에서, 그리고 내가 먼저 교실 친화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와 그 특징

글 | 김라경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I.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고시(공포)함으로써 시행되어 왔다. 이 문서화된 계획이 제정, 고시 또는 공포된 순서에 따라 제○차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왔으며, 차수가 각각 달리 부여된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교육과정 고유의 성격이나 이념상의 특징이 있었다.

교육과정 개정 방식에 있어서는 주기적 및 일시적 개정 방식을 취하여 왔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의 체제나 철학은 그대로 유지한 채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차수를 부여하지 않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하였다.

광복 후부터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기 전에 있었던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 요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의 역사와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와 특징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의 시기(1945~1946)

815 광복과 더불어 미군에 의한 직접 통치를 받게 된 우리나라는 1945년 9월 17일, 일반 명령 제4호로 모든 공립 소학교에 9월 24일을 기하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사립 소학교는 개교 전에 당국

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각 도에 통첩을 보내어 10월 1일부터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신 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 방침’을 시달하였으며, 교수 용어를 한국어로 할 것과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은 일체 교수함을 금하는 한편, 평화와 질서를 당면한 교육 목표로 하였다.

교과목 중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수신과(修身科)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공민과를 신설한 점, 일본어 중심의 국어가 우리말과 글 중심인 국어로 바뀐 점, 일본 역사 교육이 폐지되고 우리 국사 교육이 시행된 점 등 주로 일제의 황민화 교육을 탈피하려고 하였던 점이 특징이다.

(2) 교수 요목의 시기(1946~1954)

광복 직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수 요목이 없었다. 교수 요목의 시기는 광복 후부터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를 말한다.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1946년 2월 21일 ‘교수 요목 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 요목을 제정하고, 1946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부 교수 요목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이 시기에는 교수 요목과 교육과정을 엄밀히 구분짓지 않았으며,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나 제목을 열거하는 데 불과하였으므로

교수 목표나 지도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때의 교수 요목은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 하였으며,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였다. ‘흥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강조하였고, 일재의 잔재를 제거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하였음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임시방편으로 요목을 정하느라 교과와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3)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1963)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제정, 공포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1955년 8월 1일 문교부령 제44호, 제45호, 제46호로 각각 공포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말한다.

문교부는 교육법에 근거하여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625 전쟁을 겪게 되어 일단 중단되었다가 교육과정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의를 거쳐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하였으며, 1955년 8월 1일자로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 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제1차 교육과정이라 불리며, 법령상의 명칭이 ‘교과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1차 교육과정을 흔히 교과 중심 교육과정 강조의 시기라고도 한다. 즉,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이란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때의 교육과정은 지적인 체계가 중심이 되어 있기는 하나, 생활 교육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여러 면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자체는 ‘교과 중심’이었으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편찬하는 교과서는 이미 ‘생활 중

심’을 지향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이나 목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현실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사회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둘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교육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내용은 적절, 필수, 최소량이어야 함을 밝혀 지적 체계와 국가 기준으로서 교육과정 체계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넷째,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특별 활동 시간을 배당하여 전인 교육을 지향하였다.

(4)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1973)

제2차 교육과정은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부르며,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 제120호, 제121호, 제122호로 제정, 공포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교육과정은 1969년과 1972년에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휴전 성립 직후 제정된 제1차 교육과정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 후 국내외 정세 및 사회 변화, 스푸트니크(Sputnik)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세계적인 교육 경쟁의 구체화 등으로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때의 교육과정 개념은 교수 요목이나 지적인 체계로 구성된 교과 과정과는 달리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과정을 생활 중심 교육과정 또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기초 학력에 충실을 기하고, 교육과정의 계열을 합리화하여 각 학교 사이에 일관성을 지니도록 하였으며,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 경영을 지향하였다.

(가) 1969년의 부분 개정

1963년 2월에 제2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후, 1968

제6차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 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재량 권한을 확대한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년의 국민 교육 현장 선포,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대입 예비 고사제 실시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 개정이 불가피하여 1969년 9월 4일 문교부령 제251호로 개정령을 공포하고 1970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한글 전용을 위하여 ‘한자 한문’의 지도 내용을 삭제하였고, 사회과의 2학년(역사 분야)에서는 국사의 체계적인 교수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사 부분을 세계사와 분리하였으며, 실업 가정과에서는 남녀 공통 필수인 ‘기술’ 과목을 신설하였고, 특별 활동을 강화하여 집단 활동 영역을 신설하였다.

(나) 1972년의 부분 개정

1972년에 중학교 교육과정은 한문과가 신설되면서 문교부령 제300호(1972. 5. 8.)로 다시 한 번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1969년의 개정에서 한자 교육은 일단 폐지되었지만, 한문 학습을 통하여 전통 문화의 바탕 위에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한문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5)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1981)

제3차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부르며, 1973년, 1974년에 걸쳐, 제정, 공포한 문교부령 제310호, 제325호, 제350호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차 교육과정 제정 시 처음으로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서 교육과정심의회(운영 위원

회, 학교별 위원회 및 교과별 위원회의 3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심의회에서 1971년 1월 시안을 확정된 뒤 실험 평가를 거쳐 공포된 것이 제3차 교육과정이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의 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1957년 스푸트니크(Sputnik) 충격 이후 1960년부터 관심을 끌게 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에 도입하였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제3차 교육과정의 이념이 된 것은 1960년대 이후 주체성을 강조하여 제정된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이다. 제3차 교육과정은 이 국민 교육 현장에 나타난 교육의 지표인 ①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 ② 협동 정신 ③ 국민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가) 부분 개정

1977년 2월 28일 문교부령 제404호로 이루어진 부분 개정에서는 산업체 근로자들을 위하여 산업체에 중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또, 1979년 3월 1일에는 교육과정 전체의 체제 통일, 지구 수정, 맞춤법 통일 등 체제 정비를 하여 문교부 고시 제424호로 고시하였으나,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이 문교부령에서 문교부 고시로 바뀌었을 뿐이고, 교육과정의 내용 변화는 없었다.

(6)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1987)

제4차 교육과정은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제정, 고시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

한다.

제3차 교육과정은 몇 차례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였지만, 새 공화국 출범을 맞이한 1980년대 초의 정치적, 사회적 특수 상황과 새로운 교육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와 함께 새 교육과정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러한 필요에서 정부는 이미 730 교육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교부는 교육과정을 개발 하던 종래의 방식을 탈피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를 1980년 10월에 위촉하였다.

따라서, 제4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연구 개발(R&D)형 교육과정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간의 한국교육개발원의 기초 연구를 토대로 공청회와 심의회 등을 거쳐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확정 고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이 지닌 학습 내용의 과다, 학습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 교과목 위주의 분과 교육, 기초 및 일반 교육의 소홀, 전인 교육 및 인간 교육의 미흡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국민 정신 교육의 체계화, 전인 교육의 강화, 과학 기술 교육의 심화,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에 두고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강조하였다.

새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의 입장이나 접근 위에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의 정신이 반영되었고,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도 반영되어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교육과정이 되었다.

(7)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1992)

제5차 교육과정은 1987년, 1988년에 걸쳐 개정한 문교부 고시 제87-7호, 제87-9호, 제88-7호인 중학

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차 교육과정 개정까지는 교육과정 개정 배경이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한다거나, 학문적 경향의 변화에 따른다는 비교적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제5차 개정 때에는 사용 중인 교과서의 사용 기간이 5~7년을 넘을 수 없다는 행정상의 이유가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즉, 교육 철학, 학문 내용, 교육 방법의 변화, 경제적 발전과 사회의 변화, 현행 교육과정 고시 이후 7년 경과, 국제 경쟁력 강화의 필요에 의해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① 기초 교육의 강화, ②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③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강조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함을 기본 원칙으로 1987년에 개정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이 제5차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역화'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제4차 교육과정과 차이점이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를 점차 지방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하나의 기준으로서 열개가 되는 준거만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해 가는 출발점으로서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문교부는 1986년 2월 19일자로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각종 심의회, 수정 보완 작업 등을 거쳐 1987년 3월 31일에 문교부 고시 제 87-7호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먼저 고시하였다.

(8)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1997)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제1992-16호, 제1992-19호로 고시한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6차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는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 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싼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 전망이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이라는 특별한 시대적 의무를 지니게 된다. 기초 보통 교육의 교육 내용 면에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와 교육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재량 권한을 확대한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990년 3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준비 단계에서 우선 교육과정 실험 연구 학교 및 협력 학교를 지정하고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1990년 6월에는 초 중학교 교육과정 기초 연구 및 총론 개정안 연구를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에 위탁하였으며, 차후 교과별 각론 개정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원대학교, 서울대학교(12개 기관) 등에 연구를 위탁하였다.

기초 연구 및 총론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전국 초 중등 교원 대표 세미나, 공청회, 텔레비전 공개 토론회, 신문지상 토론 및 보도, 총론 시안에 대한 검토 의견 조사가 실시되어 각계 전문가와 교육 관계자가 개정 연구에 참여하였고, 특히 언론 보도 기관을 통해 시안 및 개발 과정이 자세히 공개됨으로써 초 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게 되었다.

총론 개정 시안은 교육과정 심의회에 회부되어 면밀하게 심의되었으며, 교육부 편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현장 교원 등과의 합동 집중 작업, 교육부 편수

담당자의 최종 집중 작업을 거쳐 1991년 12월 28일에 제6차 교육과정의 총론이 먼저 확정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은 ①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②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③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등 네 가지를 개정 중점 목표로 설정하였다.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위해서 교육부가 전담 하던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분담시켜 이들의 자율 재량의 권한을 확대시켰고,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를 위해서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하게 다양한 이수 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고, 필수 과목을 축소하는 한편 선택 과목을 확대하여 교육 내용의 획일성을 해소하였다.

또,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서 학습량과 수준을 조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를 고려하며, 학습과 생활의 기초 능력을 신장하고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다.

(9)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2007)¹⁾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1997. 12. 31.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고시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 개혁 위원회에서 발표한 신교육 체제는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철을 비전으로 삼았으며,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려고 ① 필수 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 확대, ② 정보

화 세계화 교육 강화, ③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교육과정 개선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교육 개혁 위원회 내에 ‘교육과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 말 개정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골격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 위원회에서는 1996년 2월 9일에 교육 개혁 과제의 하나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제시하였고, 세부 개정 지침으로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체제 설정 등 신 교육과정 편제 도입, ②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③ 능력 중심의 목표 진술과 구체적 내용 제시의 최소화, 독서 교육 강화, 교과 교육에서 컴퓨터 활용 교육 강화, 평가 방법의 개선 등 교육과정 각론 개발의 주요 지침, ④ 선택 과목 도입에 따른 수능 제도의 개선,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 확대 및 교과서의 질 제고, 다양한 교사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교사 연수 강화, 학교 환경 및 시설의 개선 등 지원 체제 확립을 제시하였다.²⁾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는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 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싼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 전망이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 온 교육 내용 전반에 걸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개혁을 요구하였고,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시대적 교육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부는 1996년 3월부터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체제 구조 개선 기초 연구, 요구 조사,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결국, 이러한 시대적 교육적 요청에 부응하여 한국 교육개발원에 초 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연구 개발을 위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등(14

개 기관)에 각론 개정 시안 연구 개발을 위탁하여, 세미나, 현장 검토, 심의회 등을 거쳐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로 제7차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학생 개인의 능력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하에 제7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표방하였다. 첫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구성하였고, 교육과정 편제에 과목군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넷째, 재량 활동을 신설, 확대하였다. 다섯째,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였고 창의성과 정보 능력 배양을 강조하였다.

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지정권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특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하였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방식 전환에 따른 제7차 교육과정기의 부분 개정은 2004년, 2005년, 2006년에 걸쳐 세 차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2004년과 2005년의 부분 개정은 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중학교 교육과정에도 관련되는 부분 개정은 2006년에 이루어진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위한 제3차 부분 개정으로서, 교육부 고시 제2006-75호로 2006년 8월 29일에 고시되었다.

(10) ‘2007년 개정교육과정’ 시기(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과 내용 개선에 중점을 둔 개정을 도모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로 2007년 2월 28일 고시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에 기초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개념에서 학년별 개념으로 전환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설정,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 활동의 신설 등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교원 및 시설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여 교육과정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양한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라 학교급별 수업 시수 일부를 조정할 필요와 같은 개정 배경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새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수시 개정 체제는 종래의 주기적 및 일시적 개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2005년 2월부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새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2004년부터 2년간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을 위탁하였다. 개발된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해 1년여 간의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쳤으며, 토론회 공청회,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등 교육과정 개정 사항에 대한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6개의 과목군으로 조정하였고,

학습량 및 수준을 적정화하였으며, 미래 무한 경쟁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과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 현행 주 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른 수업 시수 조정,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 및 역사 교육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연**

- 1)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경환, 박제윤, 권영민 (2002)의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 2)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위원회,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Ⅱ)’, 1996. 2. 9. 제3차 대통령 보고서, pp. 38~52.

기초 기본 교육의 중요성

글 | 김명숙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시민을 키우고자 하는 교육 당국은 공통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학력을 갖추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학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학력을 습득하는 목표로 하는 기초 기본 교육은 학교와 교육 당국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최소 필수 의무 사항이다. 이처럼 기초 기본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사교육 등의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학생 간, 학교 간 학업 성취도의 격차가 심해지는 가운데, 기초 기본 학력조차 성취되지 않은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초 기본 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를 모든 학생들에게 성취시켜 주지 않은 채 학생들을 사회에 내보낸다는 것은 학교와 교육 당국이 책임을 유기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초 기본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I. 기초 기본 교육의 개념

기초 기본 교육은 기초 학력과 기본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초

학력의 개념은 무엇인가? 기초 학력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김명숙 외, 2003).

첫째, 모든 교과에서 형성되는 학력에 대하여 기초적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어 및 수학 교과에서 형성되는 ‘언어(言語)와 수(數)에 관한 학력’을 기초 학력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경우에도 언어와 수에 관한 총괄적인 학력을 전체로서 기초 학력으로 보는 입장과 언어와 수에 관한 학력 중에서도 특히 읽기, 쓰기, 셈하기의 3R(reading, writing, arithmetic)로 좁게 한정하여 보는 입장의 두 가지가 있다.

둘째, 각 교과의 학력 중에서 기저(基底)가 되는 기초적 기본적인 학력을 기초 학력으로 보는 견해이다. 요컨대, 국어와 수학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각 교과에서도 그 교과의 토대가 되는 기초적 지식이나 기능이 있으며, 그것을 기초 학력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셋째, 학력을 학교 교육의 단계 또는 위계에 터하여 파악하는 관점으로서, 후(後) 교육 단계의 학력 형성의 기초가 되는 전(前) 단계의 학력을 기초 학력으로 보는 견해이다. 학년 간, 학교급 간 교육 단계의 구분 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초 학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학년 간에서는 저학년의 학력이 고학년의 학력에 대하여, 학교 간에서는 초등학교의 학력이 중학교의 학력에 대하여 각각 기초 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기본 학습 능력’의 개념을 ‘다음 학년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각 학년 단계에서

최소한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후(後) 교육 단계의 학력 형성의 기초가 되는 전(前) 단계의 학력을 기초 학력으로 보는 견해를 취한 것이다.

넷째, 국민 교육 제도로서의 의무 교육 단계에서 형성되는 학력을 국민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능력이라고 파악하여, 이를 국민 공통 필수 학력으로서의 기초 학력으로 보는 입장이다. 요컨대 의무 교육 단계에서 교과로서 설정되어 있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공통 교육으로서 이수해야 할 교양이며, 바로 의무 교육 단계의 각 교과에서 습득해야 할 능력을 기초 학력으로 보는 입장이다.

다섯째, 자립한 국민으로서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 자질 역량으로서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능력을 기초 학력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국민적 교양의 최소 성취 기준(minimum essentials)을 설정하여 기초 학력으로 보는 견해이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진학률이 99.5% 정도 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교육 종료 단계의 학력 수준을 국민으로서 필요한 기초 학력으로 보는 견해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본 계획(2001) 및 기초 학력 책임 지도제의 기본 계획(2005)에서는 '기초 학력'이라는 개념 안에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 능력'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 대한 또는 교육과정상 교과별, 학년별 최소 수준의 '기본 학습 능력'을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3R에 해당되는 언어력 및 수리력은 기초 학력이고 교과별 최소 수준의 학습 능력은 기본 학습 능력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을 '기초 학습 부진 학생'으로 정의하고, 학년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최소 수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교과 학습 부진 학생'으로 정의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초 학력에 대한 개념에 근거하여 '국가 수준 초3 기초 학력 진단 평가'에서는 기초

학력을 학교 학습을 계속 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되며, 사회 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언어력 및 수리력 중 초등학교 3학년이 성취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라고 재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언어력(language literacy) 및 수리력(numeracy)은 구체적으로 읽기, 쓰기 및 기초 수학을 의미한다. 읽기, 쓰기 및 기초 수학의 수준은 해당 교과, 즉 국어와 수학 학습을 하는 데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도 꼭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 사회 생활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범교과적 능력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개념 정의에서는 기초 학력이 3R에 해당되는 언어력 및 수리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넓게는 3R와 기본 학습 능력 모두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글은 3R에 해당되는 언어력 및 수리력과 기본 학습 능력을 포섭하는 광의의 기초 학력 개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기초 학력은 3R에 해당되는 언어력 및 수리력을 의미하고, 기본 학습 능력(또는 기본 학력)은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의미하기로 정의한다. 기초 기본 교육은 이러한 기초 학력 및 기본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II. 기초 기본 교육의 중요성

최근 초등학교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나 부모의 무관심 또는 선행 학습에 대한 부모의 반대 의견 등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기초 언어력과 수리력을 가진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은 선행 학습을 미리 하고 입학한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행 학습 없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초반부터 사실상 기초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기초 학력을 습득할 기회를 상

2007년에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에서 약 2만여 명의 기초 학력 미달자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실하게 된다. 또, 중 고등학교에서도 학급 내 학력 격차가 심해져서 교사가 중간 또는 그 이상 수준의 학생에게 기준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하위권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수업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초3 기초 학력 진단 평가’ 결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의 3~5%가 기초 언어 및 수리력을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는 10~20% 정도의 학생이 기초 기본 학력을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에서 약 2만여 명의 기초 학력 미달자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왜 모든 학생들이 기초 기본 학력을 습득하고 학교를 졸업해야만 하는지 또는 기초 기본 교육이 왜 모든 학생에게 중요한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오랫동안 교육은 국가 측면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초 기본 교육의 중요성도 이처럼 국가와 개인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많은 학자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학습의 계열성과 위계성 때문에 각 단계에서 기초 기본 학력이 성취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

고 학습 결손이 누적되어 학습 실패자가 되므로 기초 기본 교육이 중요하다.

기초 기본 교육의 기회가 충실하지 못할 경우 누적적인 학습 부진을 겪게 된다. 수학의 기본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보다는 언어 능력의 기초 학력 부진으로 인해 수학 기본 학력을 습득하지 못한 사례(예 : 김경근 성열관 김성숙, 2007)는 기초 학력의 부재가 다른 영역의 학습 부진 및 학습 실패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까지 3R에 해당되는 기초 언어 및 수리력을 성취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후의 학업에서 계속 학습 부진아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3 국가 수준 기초 학력 평가를 통해 초등학교 3학년에서 기초 학력을 진단하여 기초 학력 미달자에 대한 처방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 학력의 미성취 및 전 단계 기본 학력의 미성취는 이후 학습에서 지속적 학습 결손과 실패를 유발하기 때문에 기초 기본 학력을 제때에 성취시켜 주는 기초 기본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둘째, 기초 기본 학력의 부재로 인한 학습 실패의 지속적 경험은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발달시켜 추후 학습 성공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기초 기본 교육이 중요하다. 기초 기본 학력의 부재는 다음 단계에서의 학습 실패를 유발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 실패의 경험은 학습에 대한 동기, 흥미, 자신감 등을 상실하게 만들어 이후 학습 자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학습 자체를 포기하게 한다(Bloom, 1971- 13-

28 ; 김수동 외, 1998).

지속적인 학습 실패가 학습된 무기력을 유발한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오래 전에 확인된 사실이다. 학습 부진아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 클리닉에서 많이 쓰는 전략은 우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즉 기본 학력에 해당되는 내용을 집중 학습시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게 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다 어려운 학습 내용을 습득시키는 것이다.

기초 기본 학력 미달자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 상실은 자칫 학교에 대한 기피감,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 내지는 불행감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초 기본 학력을 성취하는 것은 학생의 추후 성공적 학습을 위한 정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셋째, 기초 기본 학력은 지식 기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므로 지식 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기본 교육이 중요하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자기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때에 따라서는 지식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 기본 학력이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선별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큰 장애를 갖게 된다. 이는 기초 기본 학력이 없이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기초 기본 학력이 부진하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지식 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생애 학습 능력이 저하되므로 기초 기본 교육이 중요하다. 지식 기반 사회인 현대는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평생 학습 시대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지식 축적은 어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초 기본 학력 없이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스스로 공부할 것을 찾아 나가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저하되며, 이러한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없이는 평생 필요한 것을 배우는 생애 학습 능력이 떨어져 지식 기반 사회

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처럼 모든 학생들의 지속적인 자기 계발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 기본 학력을 성취시키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기초 기본 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은 자아 실현에 장애를 겪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초 기본 교육이 중요하다. 기초 기본 학력은 학교에서 다음 단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기초 기본 학력은 학생들의 생존권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 기본 학력이 습득되지 못한 채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간다면 이들이 자아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받고 사회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언어 및 수리력의 기초 학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후 사회에 나아가 낮은 임금을 받고, 사회 소외자가 되거나 심지어 범죄에 연루되는 확률이 높다는 외국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기초 학력 미달인 10세 초등학교 중에서 기초 학력 미달인 학생은 기초 학력을 가진 학생에 비해 문제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고 사회에 나아가 알코올 및 심리적 문제나 범죄와 같은 사회 부적응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 외국의 사례(Torestad & Magnusson, 1996)가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기초 기본 학력이 미달된 채 이들을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학교가 책임을 유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 기본 학력은 사회에 적응하고 자아 실현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므로 헌법에서는 이를 학습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수천(2005)은 기초 학력 부진아에 대한 지도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명시한 헌법 제31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모든 학생은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받아야 하고,

학교 교육은 이를 성취시켜 주어야만 하며, 이러한 교육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었다는 것이다. 기초 기본 학력이 개인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초 기본 교육에 대한 권리는 단순히 교육 기회에 대한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초 기본 학력의 성취 결과에 대한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즉, 모든 학생이 기초 기본 학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초 기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초 기본 학력이 낮아서는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므로 기초 기본 교육이 중요하다. 이상의 진술에서는 학생 개인의 측면에서 기초 기본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으나, 마지막으로 국가 경쟁력의 측면에서 기초 기본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국민의 기초 기본 학력과 국가 경쟁력의 관계를 설파하였는데, 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는 물론 인도나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초 기본 학력의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오랫동안 경제적 침체를 경험한 후 다시 영국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국 국민의 기초 기본 학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방법으로 국가 교육과정 평가(NCA)를 실시하였다. 국가 교육과정 평가는 국민의 기초 기본 학력을 상세한 성취 기준으로 명시하고, 공교육 기관이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었는지 평가를 통해서 파악하는 제도이다.

미국이 ‘한 명의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No Child Left Behind)’ 법안(2001년)을 실시하여 사회적 소외자나 소수 집단 등 교육 기회가 낮은 집단의 기초 기본 학력을 높이고자 한 것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에도 있다.

일본이 최근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를 전 학생에게 다시 실시하는 것도 역시 기초 기본 학력을 확실히

성취하게 하여 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 물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만 학생들의 기초 기본 학력의 성취를 촉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또는 대다수 국민의 기초 기본 학력의 성취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III. 국가 교육과정 개선과 기초 기본 교육 보장

이처럼 개인의 지속적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 기본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모든 국민에게 기초 기본 교육을 보장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지식 기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보장하여 주는 것은 초 중등학교의 핵심적인 사명이며, 동시에 교육 당국의 사명인 것이다.

이러한 기초 기본 학력 보장에 대한 논의는 기초 학력 미달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된다. 기초 기본 학력의 미달이 학생 개인의 문제인가, 또는 가정의 문제인가, 또는 교사나 학교의 문제인가, 아니면 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문제인가?

기초 학력 미달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김경근 성열관 김정숙, 2007)은 기초 학력 미달의 원인을 대부분 가정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초 학력 미달자에 대한 교사 면담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은 기초 학력이 습득되지 않은 학생들은 가정의 무관심이나 좋지 않은 환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기초 학력이 미달되었다는 것이다. 기초 기본 학력 부진에 대한 교사 면담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학생의 기초 학력 부진이 가정 교육이나 사교육에서 선행 학습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교사의 인식이다. 이러한 견해는 일견 맞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의 연구에서도 기초 학력의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학부모 및 학교의 경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연구는 학교의 영향력에 의해서 기초 기본 학력의 성취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필요한
기초 기본 학력의 구체적인 능력과 성취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기초 기본 학력에 대한
종전의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

가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또는 가정이나 사교육 기관에서 미리 학습을 하고 학교에 오지 않아서 기초 기본 학력 미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인식은 될지언정 교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인식이 아니다. 이것은 교사의 책임이나 학교의 책임을 가정에 전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가정 환경이 열악하거나 학부모가 관심이 없는 학생의 기초 기본 학력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학부모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학교에서라도 이들의 기초 기본 학력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기초 기본 학력은 반드시 학교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중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등의 이유로 기초 학력이 미달된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 학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교에서 실시한 기초 기본 교육이 이들이 사회에 나온 후에 실시하는 기초 기본 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에 기초 학력 책임 지도제를 도입한 논리는 바람직하다.

핵심적인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능력을 배우고 졸업하도록 국가와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 기초 학력 책임 지도제의 구체적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기초 학력 책임 지도제의 기본 계획은, ① 우선 지식 기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

본적인 능력을 설정하고 학교에서 배워야 할 국민 기초 교육의 최소 수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② 기초 교육의 최소 수준, 즉 기초 학력의 도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③ 평가를 통해 밝혀진 기초 학력 미달자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①~③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잘 실천해 내는 것은 기초 학력 책임 지도제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기초 기본 학력의 구체적인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기초 학력 미달자를 찾아 내며, 기초 학력 미달자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하는 것 중에서 하나도 쉬운 것은 없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필요한 기초 기본 학력의 구체적인 능력과 성취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기초 기본 학력에 대한 종전의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정보 사회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기초 기본 학력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우선, 흔히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학력은 단순 암기를 요하는 지식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초 기본 학력에 단순한 암기 위주의 지식만을 포함시키는 것은 시대 착오적임을 지적하고 싶다. 최근에는 수학에서조차 기초 학력과 개념 이해를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구별짓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Hung-Hsi

Wu, 1999 ; M. Radu1, 2007). 기초 기본 학력에는 암기 위주의 지식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개념 이해 및 절차적 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분석과 추론 및 적용과 같은 고차적 사고력도 필요하면 기초 기본 학력에 포함시켜야 한다. 저성취 학생들도 교육 방법만 좋으면 고차적 사고력을 요하는 교육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Zohar & Dori, 2003)는 기초 기본 교육은 저차적 사고 내지는 암기 위주의 지식만을 포함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깨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기초 기본 학력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지식보다는 지식의 전이와 실제 생활의 적용이나 실제 문제 해결력도 강조하는 지적 역량을 기초 기본 학력의 구체적인 능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지식은 학교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및 직업 세계에 전이되어야 가치가 있다.

학교 교육은 학생이 학교에서 사회 및 직업으로의 이행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Resnick, 1997). 이것은 개념 이해와 절차적 지식 및 어느 정도의 고차적 사고를 요하는 것을 기초 기본 학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첫 번째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암기 위주의 지식은 전이가 잘 되지 않는다. 전이가 잘 되려면 개념 이해와 절차적 지식 및 고차적 사고가 교육되어야 한다.


또, 실제 세계와 직업 세계로의 전이가 잘 일어나려면 실제 세계와 직업 세계의 맥락을 교육 내용에 접목시켜야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학교에서 배운 추상적 맥락, 또는 학교 맥락의 지식을 실제 사회나 직업 세계로 전이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기초 기본 학력에 대해 실제 사회 및 직업 세계의 맥락을 도입하는 참 교육(authentic learning)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교과 기본 능력에만 국한하지 말고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실제 생활 능력

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설정하여 이를 기초 학력의 구체적 능력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자기 관리 능력이나 사회 적응 능력과 같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의적 측면도 기초 기본 학력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기초 학력 부진 학생들의 상당수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기본 학력에 대해서도 모든 교과보다는 일부 교과의 기본 학력을 보장하되, 그 내용 범위를 대폭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은 의도 는 좋으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초 학력 부진 학생에 대하여 지적 성취만을 강조하여 공부만 시키는 것이다. 기초 학력 부진 학생들은 기초 학력 부진으로 인하거나 가정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이미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 방과 후 학습 등을 통해서 지적인 측면의 보충 학습만 시킨다면 먹고 싶지 않은 학생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 기초 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정서 및 환경 등에 대한 상담과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처방을 하여 이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글 |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교육과정 자율화’라는 용어는 2008년 들어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 용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등장한 정치적 산물로서 이해될 수 있겠으나 그 이전에도 중요하게 부각되어 온 주제이므로 이미 교육과정학의 주요 문제이기도 하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그동안에도 교육과정 분야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던 주제가 정치적 변화에 힘입어 전면부에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율화’라는 용어의 상징성은 지난 415 학교 자율화 조치에 의해 그 빛이 바랜 감도 약간 있다. 이 조치가 학교 현장은 물론 교육 주체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함으로 인해 ‘자율화’라는 용어에 다소 부정적인 어감이 들도록 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참여정부 시절의 ‘혁신’과 마찬가지로 ‘자율’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든다.

이러한 ‘예감’이 드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학교 ‘자율화’가 마치 목적처럼 추구되고 있다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415 학교 자율화 조치에서도 도대체 ‘자율화’를 통해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목적의 추구가 결여되었기에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자율화에 있어서도 자율화는 그 자체가 수단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자율화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율화의 순기능

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하게 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시론적 논의이며 이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후 교육과정 자율화 논의에 있어 그 기초를 제공하는 데 일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II. 교육과정 자율화의 개념

교육과정 자율화는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고 이 용어보다는 분권화(특히 제6차 교육과정 이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래서 자율화의 개념은 분권화를 떼어 놓고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과정 자율화의 개념은 그동안 ‘자율화’의 의미 일부를 포괄적으로 지칭해 온 ‘분권화’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쓰였고 그것에 대한 ‘작업 정의’(working definition)를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었다. 이에 관련 문서에서 ‘자율’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확인하고 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에서는 “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라고 적혀 있다. 그 이전에 나온 531 교육 개혁안에서는 신교육 체제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6가지 교육 운영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율화를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권한의 이양’으로 정의한다면
그 권한을 얼마나 이양할 것인가에 따라
자율화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③ 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 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문서에서 사용된 ‘자율’ 용어는 학교 교육 운영 방식에서 규제와 통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편성, 운영 권한에 있어 학교가 규제와 통제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박순경(2008년 3월 월례 학술대회 발표 원고)에 따르면 분권화는 지역화, 자율화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율화는 교육청을 매개하지 않고 단위 학교에 직접 자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지칭할 수 있다. 한편 행정 관할 구역의 분리에 따라 16개 시·도 교육청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분권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분권화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과 같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역화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지역화 내용 영역, 교과서에서의 지역화 단원(이를테면 ‘서울의 생활’), 지역화 교과서(이를테면 ‘우리들은 1학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주장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자율화 관련 용어의 개념〉

- ① 분권화 : 수직적으로 상·하급 관청 사이의 권한 분배
- ② 지역화 : 수평적으로 본 행정 구역 분할에 따른 지역 특성 반영
- ③ 자율화 :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의 이양

이상에서와 같이 자율화를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권한의 이양’으로 정의한다면 그 권한을 얼마나 이양할 것인가에 따라 자율화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또, 교육과정 자율화 논의는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 중앙 정부와 일선 학교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형성될 것이다. 이때,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은 여전히 중앙 정부와 일선 학교의 매개적 역할을 유지해야 할 것이나, 주로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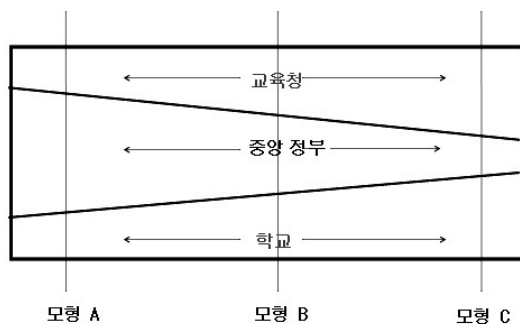
Ⅲ.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교육과정 자율화는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권한 문제에 깊은 관련성이 있다. 즉, 교육과정 의사결정 또는 통치 구조(governance)가 통제형으로 가는가 아니면 자율형으로 가는가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과정 자율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논의되었던 용어, 분권화도 결국 권한 분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율화가 분권화의 정도에 따른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다면 그 권한 분배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율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권한의 소재(locus)에 따른 구분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소재)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음 그림의 모형 A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앙 정부가 거의 대부분을 정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재량 활동이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등과 관련하여 권한이 일부 이양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도입 당시 교육부는 국가, 교육청, 학교, 학생 차원의 분권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첫째, 재량 활동의 경우 그 수업 시간 수가 6차(학교 재량 시간)에 비해 초등에서 주당 2시간으로 늘린 것과 중등에서 신설하는 것이었다. 둘째, 고등학교 2 3학년 급에서 교육청, 학교, 학생이 28 단위 이상의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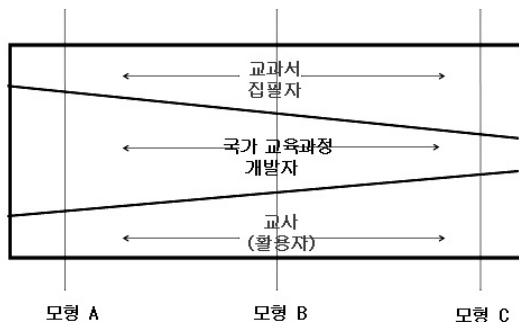


【그림 1】 권한의 소재(所在)에 따른 분권화 모형

그러나 이것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권한이 충분한 정도로 이양되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분권화가 기대된 것에 비해 효과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 많다.

(2) 교육과정 의사 결정자에 따른 구분

교육과정 의사 결정자는 교육과정의 개발자, 교육과정을 교과서로 실현하는 집필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들로 구성될 수 있다. 그 밖에 많은 관련 의사 결정자들이 있겠으나 이 세 주체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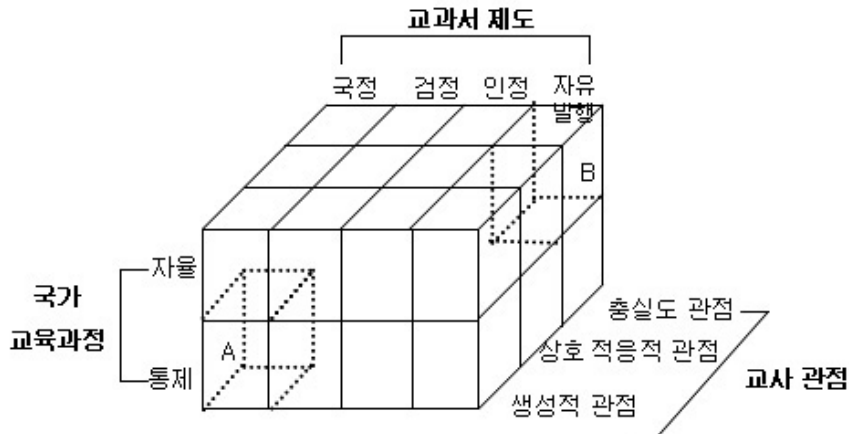
【그림 2】 인적 구분에 따른 분권화 모형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모형 A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B와 C의 형태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B, C의 형태로 발전한다고 하여 그 자율화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을 자동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교과서가 다양화되고, 해당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교사들이 교과의 핵심 원리를 추출하여 수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신장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과정 자율화의 3차원 모형

교육과정 의사 결정의 주요 주체를 행정 단위상 하향화되는 경로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분권화된다면 그 실효성에 있어서 회의가 든다. 대신 분권화의 주요 단위를 국가 교육과정 개발자, 교과서 개발자, 그리고 교사로 본다면 보다 교육과정 자체(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전략을 포괄하는)를 중심으로 분권화 또는 자율화를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현재 분권화의 단위가 ‘국가 → 교육청 → 학교’로 설정되었지만, ‘국가 교육과정 → 교과서 → 교사’의 경로도 있음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국가 교육과정의 개선 → 교과서의 다양화 → 교사의 재구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보다 의미 있는 자율화를



【그림 3】 교육과정 자율화 논의를 위한 3차원 모형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이상의 3단위 사이의 연계를 느슨한 강제력으로 약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의 신장이 중요하다는 강조를 넘어, ‘재구성’의 전문성을 어떻게 신장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자율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교육과정, 교과서 제도,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교사의 관점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다. 이 모형에서 A에 위치한 경우는 교육과정의 국가 통제와 국정 교과서 하에서도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는 경우이다. 즉, 이 관점을 가진 교사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절대시 하지 않고, 교과서를 교육의 소재로만 취급하며, 학생들의 상황이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필자가 이러한 사례를 드는 이유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단지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1차원적인 권한 분배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며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다차원’의 문제에서 중요한 세 가지 차원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 교육과정의 통제 정도, 교과서 제도, 교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필자가 도달한 소결이다.

IV. 교육과정 자율화에 관련된 질문

(1) 국가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자율화의

장애 요인인가?

자율화가 하나의 수단이라면 자율화는 교육과정의 획일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단위 학교에서 다양하고 유의미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교육과정의 획일적 운영은 주로 입시 문화에 의해서이며, 국가 교육과정은 그것의 단수성(오직 하나의 국가 교육과정이 존재)과 교과서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교육의 획일화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이다.

교육과정의 국가 관리라는 제도 자체가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는 것이기보다는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인 통제가 교육의 획일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한국에서 교육과정의 획일적 운영은 입시 위주의 학교 및 교실 문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

단위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설사 갖추어졌다 해도 국가 교육과정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것은 국가 교육과정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 교육과정 = 획일성’이라는 등식은 과잉 일반화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국가 통제와 단위 학교 자율화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합리적인 권한의 분배가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의 장에서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율화는 제공하는 것인가, 요구되는 것인가?


교육과정 자율화는 국가가 단위 학교에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시작할 수 있는 논의는 아니다.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훈련되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한 과제에 ‘주어진’ 자율성을 발휘할 자신도, 능력도 없는 경우가 발견될 것이다. 만약, 국가가 권한을 가질수록 교사의 자율성이 침해받는다고 느끼는 교사들은 학교 및 교실의 맥락과 학생들의 요구를 수업에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열망과 능력이 높은 교사들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교사들이 우리나라 교사들을 전부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결정권을 국가가 쥐고 있어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교사들은 매우 혁신적이고, 진보주의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들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들의 수는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비율로 보면 이들이 다수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교육과정 자율화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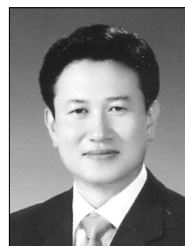
권한이 침해되어 ‘매우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사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이양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중앙 정부가 먼저 ‘주겠다.’는 것도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자율화는 현장의 교육 문화의 개선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위 학교가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만약 부당한 교육적 간섭이 있을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지위와 역량이 있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설사 갖추어졌다 해도 국가 교육과정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것은 국가 교육과정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의 ‘분권화’가 일 방향이지만 한국적 교육 문화의 독특성을 고려할 때 방임적 자율화는 유익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소재와 공공성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을 때 무조건적 자율화 모형으로 향하는 것은 중앙 집권적 체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 자율화는 학부모들의 압력에 의해 단위 학교로 하여금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를 고려하여, 향후 교육과정 자율화 논의는 결국 국가 교육과정의 한계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방향

글 | 권영민 (인천서림초등학교 교감)



I. 서론

교육과정은 현재의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대, 그러한 인간으로 육성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이 반영된 교육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교육과정은 그 나라 교육의 방향을 규정하며,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홍웅선 김재복, 1989 : 137~138).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하면서도 교육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광복 후 우리나라에서 여덟 번에 걸쳐 교육과정을 개정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문서화된 계획’으로서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학교 교육과정’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이라 함은 주로 국가 교육과정을 의미하였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평가 등 교육과정의 중요 핵심 요소들이 거의 전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결정되었고 학교는 단지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을 수용하여 실천하는 수동적 역할만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교육과정이란 국가 교육과정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만을 따로 떼어

서 논하기란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향이란 중앙 정부가 국가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며, 외국의 학문 사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국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교육과정 개정 배경에 관한 정치적 학문적 분석과도 연계되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광복 후 교수 요목이 제정되었고, 휴전이 되면서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었으며, 516 군사 정변 이후 제2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있었고, 유신 헌법이 제정된 후 제3차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으며, 제5공화국의 성립과 더불어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제6공화국의 수립과 더불어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고, 문민 정부 출범 이후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 문민 정부의 교육 개혁안을 구체화하여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사조도 일정 주기에 따라 교과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경험 중심에서 학문 중심으로, 그리고 학문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즉,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방향을 알아보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초 중등학교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개혁은
현장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응집되고 있다.
물론, 현장 중심, 학습자 중심이라는 정신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과정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었다.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 교육과정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바탕을 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 환경, 정책 참여자, 정책 결정 체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본 고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 추구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방향

교육과정이 실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형식인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각 학교별로 마련한 '단위 학교의 구체적인 실행 교육과정'이다. 즉, 그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책임지고 실현해 주어야 할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특색을 지닌 설계도', '세부적인 시행 계획'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에는 단위 학교의 교육 목표와 철학, 학교의 전통과 특성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학교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과 방법, 특색 있는 운영 방안이 나타나 있어, 전국의 각 학교가 제각기 다양한 교육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국가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알아본 학

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방향으로 국가 교육과정이 바람직한 '학교 교육과정'으로 적용될 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1) 학생의 다양한 개인차(소질, 적성, 능력)가 고려되는 학교 교육

학생의 다양한 개인차(소질, 적성, 능력)를 고려하는 것은 교육과정 설계의 기본 방향이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많은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은 특정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은 그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특별 활동'이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설정되어 학생의 소질 및 적성 계발 활동이 지속적으로 지도된 점, 제2차 교육과정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과정'을 도입하여 학생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따라 2학년부턴 인문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 예능 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 '학교 재량 시간'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개인차가 고려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전 학교급으로 확대한 점 등이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학습 부진의 누적을 예방하고, 능력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에게 학습이 늘 적절한 수준에서 도전감 있게 제시되기 때문에 학습이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과목별, 능력별 분단, 또는 학급 편성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학생들이 반을 이동해 가며 수업을 하는 형태도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학생의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 정책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을 위한 처방의 주안점을 교육과정에서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과 기본 방향은 일치하지만, 시행 과정상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변화한 것이 다른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 114).

(2) 교육 수요자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 교육

지식 기반 사회, 정보 사회, 포스트모던 사회라고 불리는 21세기 사회의 학교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즉, 거시적인 문명사적 변화에 대응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 중등학교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개혁은 현장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응집되고 있다. 물론, 현장 중심, 학습자 중심이라는 정신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과정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제2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지역성'을 강조한 점, 제6차 교육과정에서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지역 사회의 실태 및 특수성, 학부모의 요구 등을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도록 한 점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조점들은 국가 교육과정이 일반적 기준으로 그것

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각 학교에서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한 것에 따른 것들이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명문화된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은 학교 교육의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시부터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감이 높은 학교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도입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체제에서 탈피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 즉 학생 중심 교육 체제로의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율성 및 다양성이 증가된 학교 교육

우리나라의 초 중등 교육은 획일성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획일화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환경에서 탈피하고, 학생 교원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교육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증대시킴으로써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자율성과 다양성이 증가된 학교 교육은 제1차 교육과정 개발기부터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이러한 점은 당시 제1차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인 심태진 장학관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1954년 4월 20일 처음 우리나라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전국이 똑같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므로 교장에게 권한을 주자는 의미에서 '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밑줄은 술자가 임의 처리함)(김용만 외, 1998 : 66).

즉, 지역의 여건이 고려된 다양한 학교를 기대하며 ‘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발 담당자의 증언 이외에도 국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제2차 교육과정기에 고등학교에 단위제를 도입하여 고등학교 3학년 간 이수해야 할 교과별 단위 수를 기준으로 제시해 주고, 학교가 이에 따라 학년별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고등학교에,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중 고등학교에 ‘자유 선택 과목’을 신설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및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편제상 최초로 ‘학교 재량 시간’을 신설하여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및 학생의 요구 등에 따라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재량 활동을 초 중 고등학교 전 학교급으로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 고등학교 재량 활동 영역별 시간 배당 기준을 시·도 교육청의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가 편성하도록 하여 자율권을 강화하였다. 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의 경우에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집중 이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고,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에 교과목별 수업 시간 수의 증감 등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교과목 개설 운영 등에 대한 자율권과 재량 활동이라는 특정 영역의 편성 운영의 자율권 확대뿐만 아니라,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교육부-시·도 교육청-단위 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도입하여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된 자율권을 단위 학교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단위 학교는 자신의 학교 교육과정을 스스로 만들어 가게 된 것이며, 각 학교에서 자신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만들어 운영함으

로써 동일 학교급에서도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4) 교원들의 전문성에 기초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우리나라의 경우,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 방침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들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이제까지의 교육과정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는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위원회 또는 단위 학교는 자신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새로운 단원을 설정하여 원래의 교육과정 내용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에 첨가하여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것은 당시까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발 특징이었던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에 관한 모든 것을 규정해 주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교육과정 개발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5차 교육과정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역, 학교, 학급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을 제공해 주었으며(김재춘 외, 2000 : 50),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있어서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제6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서는 교육과정 결정권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분권적으로 이루어져 교육과정의 결정 구조가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면, 이를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으로 상세화하고, 이를 받아 시·군·구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상 고려해야 할 요소를 장학 자료 형식으로 학교에 제시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이란 현장 학교에서 실천될 교육과정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공통적이고 일반적 기준’이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 그대로 투입될 수 없고, 국가적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 간의 중간적, 매개적, 교량적 역할과 관여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교육과정 최종 결정자로서의 교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지속적으로 보완, 조정함으로써

학생의 실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효율성(effectiveness)을 높일 수 있다.

원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교육과정은 교육의 본질과 특성, 교원, 학생, 학교, 시설,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허용해야 하며, 이러한 융통성과 탄력성의 폭은 교육 실천자인 교원이 교육 계획과 실천 과정에서 적합하고도 타당하게 결정해야 함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교원의 전문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5) 학교 교육 내실화의 전기 제공

그동안 우리 교육은 교과서가 학교 교육을 지배하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의 교육이 똑같은 모습으로 획일화되고 말았다. 즉,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 능력, 소질, 흥미, 진로,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부모의 요구와 교원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은 무시되고, 오직 일사불란하게 교과서에 학습자를 맞추어 가는 교육이 이루어질 뿐이었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학교 교육이 그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개인적 차이와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 교육 이탈을 줄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위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이 증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학교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교육과정 평가 체제가 확립되어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학생의 교과별 내용 성취 기준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 교육과정 평가가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고, 이는 곧 학교 교육 내실화의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결 론

학교 교육과정이란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및 실태에 알맞게 각 학교별로 마련한 '의도적인 교육 실천 계획(school program)'을 의미한다.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책임지고 실현해야 할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관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과정이고, 특색 있는 당해 학교의 교육 설계도이며, 상세한 교육 운영 세부 실천 계획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지속적으로 보완, 조정함으로써 학생의 실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효율성(effectiveness)을 높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지역이나 학교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해당 학교의 교육 중점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적합성(suitability)을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의 노력과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학교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원의 자율성(autonomy)과 전문성(professional expertise)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 다양한 학교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다양성(variety)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분석이 의미를 갖는 것은 학교가 일련의 교육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질 높은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을 통하여 제공되는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의 성공 여부는 학교의 교육과정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단위 학교의 교원과 학생 실태,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요구, 학교의 교육 시설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한 대책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지속적 개선과 더불어 학교 교육 여건의 개선을 통한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교육의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의식이 제고될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이해 당사자 중에서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로 의도적인 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 교육의 주체이고 실천자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 광주 : 한울사.
- 권영민(2004),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체제 분석 - 1954~1997년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_____(2005a), 한국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2005b), 교육과정 소고, 서울 : 도서출판 서울멀티넷.
- 김용만 외(1998),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 교육과정 교과서연구회.
- 김재춘 부재울 소경희 채선희(2000),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 교육과학사.
- 홍웅선 김재복(1989), '한국 교육과정 생성과정에 대한 재조명', 통합 교과 및 특별 활동 연구 제5권 제1호, 전국교육대학 통합 교과 및 특별 활동 연구회.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며

글 |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



I. 시작하며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가속화는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교육 개혁을 단행하게 하였고 그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학습자로 하여금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자는 것이었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핵심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내용을 변화시켜야 하며 그러한 노력은 분절된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교육과정 개정을 수반하였다.

OECD(2002)의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발전을 위한 핵심 역량 규명 노력(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 DeSeCo Project), 독일의 지식의 유형으로 일반 지식(general knowledge)의 중요성을 강조(윤현진 외, 2007), 영국의 교육과정 개선(소경희 이화진, 2001), 뉴질랜드의 핵심 역량 5가지로 설정과 그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선(www.inca.org.uk) 등의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기 관리력, 대인 관계력, 의사소통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다문화 공생력 등 핵심 역량의 중요성과 교육을 통한 핵심 역량 신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발생하는 교과들의 이해 충돌로 학습자와 사회적 요구는 등한시되어 왔다.

교육과정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 전제되면,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

적 달성에 충실하여야 한다. 교육은 학습자의 자아실현과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개인인 학습자와 사회가 만나는 접점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를 분석,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은 학습자나 사회보다는 교과 우위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요구에 충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낮은 호감도,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낮은 신뢰, 학교 졸업자의 낮은 사회 요구 부응도 등 이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 개정의 관행에 기인하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개정할 독립적인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과정심의회가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자문 기구로 기능 역할이 격하되어 그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의 요구를 수렴하기에 역부족이다. 또, 위원 구성 운영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여, 합리적 대안 제시와 토론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자기 교과 이익 대변 등의 폐단을 막기도 힘들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학습자의 요구와 사회적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의 설치를 제안하며 그 필요성과 기능 및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위상을 설정하고자 한다.

II.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기능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 지배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와 사회적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과정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과정 역할 수행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전제 하에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의 구체적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 교과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교과 이해관계가 높은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해당 교과의 역할, 지위, 비중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양이에게 반찬 가게를 맡기듯,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여 국가의 기준 금리를 결정하게 하는 형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용 면에서 핵심 역량 중심의 창의적 사고와 구안 및 인성과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 요구는 계속되었으나,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지배는 여전하며, 따라서 이러한 교과 지배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기구의 신설과 이러한 기구가 교육과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정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현재의 교과 과잉, 지식 과잉 지배의 교육과정은 교수 학습의 발전, 심도 깊은 이해,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한 창의력 신장, 학생과 국민의 핵심 역량 신장,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형성의 장애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과정의 올바른 개정은 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초 중등학교의 전국 단위 핵심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및 활동을 설정하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National Curriculum Standards)은 국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 정책은 거시적 국가 교육 정책과 미시적 학교 교육 정책을 연결해 주는 교육과정 정책의 부재로 교육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웠다. 국가 교육과정 기준은 교과서, 수업, 평가, 교원 수급, 학생 수용, 시설과 설비, 학교 역할 특성화 등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 추동자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교육과정을 제대로 개발하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면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 교과의 요구가 아닌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그동안 주장에 그쳤던 교육과정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고, 대학 입학 시험의 타당화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학습과 꼭 필요함에도 과소 학습하는 폐단을 줄임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학 교과와 대학 모집단 위별 적정화를 통한 사교육비 감소, 영어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개선을 통한 영어 사교육비 감소, 고등학교 예 체능 과정을 지역 내 거점 학교에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예 체능 사교육비 절감, 대학 입학 시험 타당화를 통한 논술의 필요성 축소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 현실 가능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다. 높은 교육열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의 수준과 질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은 교육 분야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 과제이며,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적정한 종류, 수준, 범위, 분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에 대한 관료들의 획일적 통제를 극복해야 한다. 특정 교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현장 적합성이라는 미명하에 교육과정 개선안을 무위로 돌리고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일삼아 온 비전문적인 관료가 아니라, 교육의 특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들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선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의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개혁과 운영을 전담하는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 총론과 각론의 조화, 교과서, 고등학교 학생의 전략적 수용, 대학 입시, 다문화 교육 등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교육 개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가진, 상설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설립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올바른 개정과 운영을 위하여 현행의 교육과정심의회의 기능보다 더 큰 교육과정 개정의 심의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 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현장 여론 수렴 및 개선 방향 조사 연구, 교육과정 상시 개정을 위한 대안 수립 등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올바른 교과서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원 양성과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 정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Ⅲ.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위상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소극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교과 위주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에 충실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함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교육과정 심의 의결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 독립형 심의 의결 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전반을 심의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고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의 경우, (1) 교과 교육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자, (2)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며, (3) 교육 및 교육과정 개선 의지가 뚜렷한 자로 위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장점은 국가 사회의 장기적 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으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교육 관료, 교과서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제인 우리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의해 교육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둘째, 위임형 심의 의결 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 고시 권한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하되,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 주요 정책 결정을 ‘국가교육과정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위원회의 임명, 구성 방식은 앞의 독립형 심의 의결 기관의 형태와 같다. 이와 같은 위임형 심의 의결 기관의 사례는 다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현행 교육위원회 사례

- 근거: 구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 위상: 지방 의회의 위임형 심의 의결 기관
- 구성: 학교 운영 위원이 선출한 교육 위원
- 기능: 시·도 의회의 권한 중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의결

※ 금융통화위원회 사례: 한국은행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

- 근거: 한국은행법
- 위상: 한국은행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
- 구성: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관련 기관 추천 인사 등 7인. 임기 4년
- 기능: 통화 신용 정책, 한국은행 운영 관련 사항 의결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위임형 심의 의결 기관으로 할 경우 교육 관료의 획일적이고 권위적 통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으나, 위원회 내의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경우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서 단체 대표를 배제하고 일부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등의 합리적 위원 선정과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심의 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 고시 권한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하되, 반드시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사례는 다음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사례 : 법학교육위원회

- 근거 :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법
- 위상 :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심의 기구
- 구성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임명, 일부 위원은 각 기관 추천, 공무원 1인 등 13인
- 기능 :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 인가, 폐지 변경, 정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심의 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한 교육과정 정책의 일관성 및 위원 간 갈등 극복과 같은 장점도 있으나, 심의 결과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의 교육과정심의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심의 기관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각 이익 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이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실질적 심의 기구로 운영되기 위하여 전문성의 기반 위에 결정한 바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다른 이익 단체들이 존중하는 풍토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IV. 맺으며

교육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가져야 하듯이, 교육과정이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익 집단이나 교과와의 지배와 간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와의 괴리, 교과 지식 위주의 분절된 교육과정, 시험과 행정에 의해 방해받는 교육과정,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는 교육과정 개정의 반복 등 제반 문제를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학습자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를 분석하고 그러한 요구들의 교육과정적 정당성을 검토하며, 교육과정적 정당성을 확보한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우리 교육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당위성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다만, 우리 교육과정이 교과와의 과잉 지배로 그 교육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의식이 교육과정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정책은 최소한 특정인이나 특정 교과와의 이익이 대변되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교육과정에 국한된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외국의 국가 교육과정 개선 동향

글 | 박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교육 개선의 착목 시점은 어디까지나 미래이다.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근본적 질문의 한 가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바람직한 인간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해 ‘유연하고, 학습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질 높은 학습 기회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 역량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답할 때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의 학교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교육과정이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되고 있는지를 외국 사례를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난 2007년 2월에 고시된 ‘2007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상황에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오고 있는 영국, 일본, 뉴질랜드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과 교육과정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선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최근 외국의 국가 교육과정 개선의 배경

최근 각국의 국가 교육과정 개선에는 다양한 동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 중의 한 가지로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은 지식 기반 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과 자질이 새롭게 요구되는 만큼, 모든 국민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 핵심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예로 OECD(2004)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라든가 우리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2002~2004)의 국가 수준의 생애 능력 표준 개발 노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가 및 주 수준의 교육과정 개선 배경과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기반 사회의 특징과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인식해 왔다. 개인이 매일 직면하게 되는 복잡한 요구와 도전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로서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핀란드에서는 복잡한 사회에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분과적 틀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적이고 보다 통합적인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가족 생활과 사회적 관계, 경제 구조, 직업 조직 등의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 체제에 대한 근본적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교과 내용을 중시하되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요컨대 기존의 교과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미래 핵심 역량과 핵심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둘째,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각국에서는 학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캐나다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학, 산업체, 학부모 등이 학력 저하를 거론하자 학업 기준, 문해력(literacy), 수학 능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적 기대와 기초 능력 강화에 학교 교육이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학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02년 부시 행정부의 NCLB(No Child Left Behind) 관련 법안의 수립과 함께 수학과 읽기의 국제 경쟁력 저하와 도심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읽기 능력 수준 미달에 주목하고 있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실현을 거듭 강조한다.

최근에 올수록 학교 교육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지식을 존중하는 평등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모든 학습자가 교육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최근 “학습자 한 명 한 명이 모두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라는 새로운 정책 기초 하에 0~19세에 걸친 어린이와 청소년, 특히 소수 집단이나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며, 즐겁고 성취가능하며,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경제적 복지를 달성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넷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 진학을 통한 계속 교육과 직업 세계에의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이 지

적되어 최근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논의의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예로서, 프랑스의 경우에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과 그랑제꼴 또는 직업 세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 교육 및 고등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 훈련 관련 자격 인증 제도’를 현행 GCSE와 A-level의 대안으로 도입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학생의 진로를 위한 다양한 내용과 수준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진로 계발을 촉진하기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서 인문 계열과 직업 계열에 걸친 17개의 과정(programme)을 보다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Ⅲ. 국가 교육과정 개선의 주요 대상 및 내용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교육과정 개선 노력이 기울여져 온 가운데,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 있는 학습자 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최근 교육과정 관점의 변화는 교육을 통하여 ‘많이 아는 사람’을 길러 내려는 데 머무르지 않고 ‘많이 알면서 잘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교육과정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로서, 최근 영국에서는 ‘성공적인 학습자, 자신감을 가진 개개인, 책임감 있는 시민’이라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몇몇 교과는 공통적 핵심 개념 및 과정을 취하고 교육과정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호주의 빅토리아 주는 주 수준에서 제시한 8개의 핵심 학습 영역(영어, 수학, 과학, 보건 체육 교육, 외국어, 예술, 사회와 환경, 과학 기술) 중심의 기존

교육과정 틀이 모든 학생들을 의무 교육 이후의 교육이나 직업 훈련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한다고 보고 ‘빅토리아 핵심 학습 기준안’을 고안해 오고 있다.

아울러 뉴질랜드에서는 개인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복잡한 요구와 도전에 대응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습득해야 할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을 강조하면서, 국가 교육과정의 비전을 가치와 핵심 역량, 학습 영역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성해 놓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살아가는 힘’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 기본 지식과 기능 습득,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의 육성, 확실한 학력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업 시수 확보, 학습 의욕 향상과 학습 습관 확립, 풍요로운 마음, 튼튼한 체력 육성을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이념으로 설정한 바 있다.

둘째, 학업 성취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국가 및 주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거나 학업 성취도 평가를 강화하려는 방안을 활용한다. 이 가운데서 교육과정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취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중핵 교육과정(essential core curriculum)은 필수적이고 학구적 성격이 비교적 강한 수학, 과학, 언어, 사회로 구성되며, 새로이 부각되는 본질적 지식과 능력(essential new knowledge and skills)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모든 학생의 학업적 성공을 위한 조치로서 ‘방과 후 학습’은 과제나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지원, 스포츠, 예술, 문화, 멀티미디어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사례로는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기준 중심 교육 개혁 운동’에 의해 거의 모든 주에서 모든 과목의 성취 기준

(standards)을 설정하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 방식을 개발하여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는 중이다. 예로서, ‘읽기 능력 최우선 제도(Reading First)’라든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읽기 능력 고취를 위한 ‘동일 출발점(Even Start)’이라는 제도를 특기할 만하다.

셋째, 의무 교육 기간의 공통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습자가 반드시 학습해야 할 공통 영역과 내용을 제시하여 지역과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통 교육과정을 강화함은 주지해 온 사실이다. 특히,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유치원에서 10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빅토리아 핵심 학습 기준(Victorian essential learning standards)’을 개발하며, 프랑스는 공통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모든 학생이 성공적인 학업 이수, 진학, 진로 선택, 성공적 사회 진출 등을 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가치, 지식, 언어, 실무 지식 전체를 7대 영역, 즉 국어 사용 능력, 외국어 구사 능력, 인터넷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 사용 능력, 인본주의적 문화 지식, 사회성 및 시민성, 자율성 및 주도성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필수 교과를 모든 단계에서 이수해야 하는 중핵 교과(core subjects), 즉 영어, 수학, 과학과 단계별로 편성된 기초 교과(foundation subjects)로서 디자인과 기술, 정보 통신 기술, 역사, 지리, 현대 외국어, 미술과 디자인, 음악, 체육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학년 학교급 간 교육과정 연계성을 강조한다.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제정 당시부터 단계별로 성취해야 할 성취 목표를 제시해 왔다. 특히, 2002년 교육 개혁안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기초 단계’를 포함하여 6개의 학습 영역을 3~5세까지의 아이들

을 위한 교육과정 법령으로 제정하였다. 스웨덴 역시 학교급 간 연계를 위해 유치원 교육과 의무 학교(compulsory school) 교육과정을 연계하기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에 공통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며,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핵심 학습 기준을 여섯 개의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별로 성취 기준을 제시하여 학년 간 연계성을 확보해 오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초 중학교 교육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교과 및 범 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 목표와 핵심 내용, 학생의 생활 관리와 학습 능력 강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IV.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과 역할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학교 교육의 개선 노력 가운데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학교 교육의 근간으로서 비교적 강한 구속력을 갖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성격은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존립 체제를 유지하면서 강한 구속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온 프랑스, 일본, 중국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전통적인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통 교육과정이 유치원과 초 중학교 교육과정 기준이면서 이들 학교 체제 운영의 대강과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교육법 및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초 중등학교의 교과별 학년별 수업 시수와 학년 교육과정의 기준을 제시하면 각 학교는 이에 따른 교육과정 계획안을 작성하여 실천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은 초 중 고등

학교 교육과정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준이다. 1958년의 학습 지도 요령 개정 이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고시’ 형태를 취하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교육과정 체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러한 기준의 적용 대상이 국 공립학교에 한정됨을 특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 표준은 어디까지나 교재 집필과 교수 학습, 평가와 시험 출제의 준거이며,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초가 된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틀(framework)로서 기능하는 경우이다.

영국,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은 기본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본 틀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체제에서만만큼 구속력이 강하지는 않다. 이 경우에 공통 교육과정과 의무 교육에 대해 국가 교육과정이 많은 부분을 결정하지만 학교에서는 기본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의무 교육 이후의 교육과정 역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영국에서는 의무 교육 연한(11학년까지)의 학생들은 국가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지만,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의 전체를 구성해 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일선 학교가 각 교과목의 가치와 목적, 우선 순위와 특징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영역과 융통성, 권한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국가는 교육법과 국가 교육과정의 큰 틀을 통해 교육의 기본 제도와 원칙만을 결정하며 각 지방 자치 단체가 교육 공급자로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의무 교육 기간에 다룰 교과와 시수를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교

육과정 편성 운영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연방국 형태로 존립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의 주 수준 교육과정은 안내적 지침(guidelines)의 역할을 하며,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학교의 권한이다.

예를 들어, 호주 빅토리아 주의 핵심 학습 기준은 학교 수준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틀로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 배당이나 내용 선정 및 조직은 학교에 일임되고, 학교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다양한 형태로 상호 관련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한다.

V. 결론

이상에서 최근 외국의 국가 교육과정 개선 동향과 그 가운데 자리하는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선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짚어봄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우에 국가 교육과정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학교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지적 흥미와 활동, 신체적 성장과 활동, 감성 함양과 사회화의 조화를 통하여 기본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하여 ‘아는 것’과 더불어 ‘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만큼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청사진으로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과 함께 국가 교육과정의 주안점은 우선 ‘가르치기 중심에서 배우기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 학력에 대한 보장으로 학습자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학습자의 기초 학력 형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 기회의 형평성 제고로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습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기간 중앙 집중적 교육과정 체제에서 형성된 교육과정의 경직성은 보다 유연한 체질로 바뀌나가야 한다. 그것은 교육과정 관리와 행정이 지시와 통제에 치중된 데에서 벗어나 분권과 참여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단위 학교 등 교육과정의 각 주체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사안은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과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에 비추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은 미래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기존 교과 교육과 어떻게 연계해서 길러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혁신위원회(2007), 학습 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안)」 공청회 자료집, 서울 : 교육혁신위원회.
- 박순경 외(200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수정 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RC 2006-4.
- 유현숙 외(2004), 국가 수준의 생애 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 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Ⅰ~Ⅲ),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OECD(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DeSeCo)*, OECD Press.
- QCA(2006), *The curriculum : QCA Looks forward*.
- Rychen, D. S. & Salganik, L. H.(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 Hogrefe & Huber Publishers.
- <http://www.minedu.govt.nz>
- <http://www.qca.org.uk>
- <http://www.mext.go.jp>
- <http://www.moe.edu.cn>
- <http://www.education.alberta.ca>
- <http://news.boardofstudies.nsw.edu.au> 등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 정책



글 | 김정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이 글의 주제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정책 유형’을 근거로 한 ‘교과서 편찬 정책 유형’을 분류하고, 향후 다원 개방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의 발전 방안은 무엇일까’를 논의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원 개방 사회에서 공교육이 소외되지 않고 발전하려면 ‘연성 교육과정과 개방 교과서 정책’이 필요하다. 그 논리적 배경은 국가 최소성과 시장 자정성에서 찾고, 교육의 공공성을 정책 판단의 최고 가치로 삼고자 한다.

먼저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편찬 정책의 유형을 본 뒤, 향후 교과서 편찬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교육 공동체의 기대 역할을 논의하는 순서로 전개한다.

I.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편찬 정책의 유형

교육과정은 절대적 표준이 아니다. 시대 상황이 변하고, 학문적 진리도 바뀔 수 있으며, 학습자의 속성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육과정도 개정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을 개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법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선 국가 교육과정을 고시하는 힘은 정부의 권리인가, 권한인가부터 따져 보자.

만일, 권리라고 한다면 그 주체가 어느 정도 마음대로 행사하여도 남이 시비하기 어렵다. 권한이라고 본

다면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그 결과에 따라 혜택을 보게 될 쪽의 뜻을 무시하고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 이치는 헌법에서 볼 수 있다.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체가 되어 선택하면 되고, 정부는 그것을 보장만 해 주면 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포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를 경제적으로 본다면 권리 개념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은 사람이고, 권한에는 그 사람이 다르다. 공급자가 수요자를 위하여 생산하는 상품은 당연히 수요자가 선택해 주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권한을 권리로 생각하여 행사하려는 사람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 좋은 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교육과정은 학교가 운영해야 될 책무 내용이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와 학교의 권리일까, 권한일까 생각해 보자. 답은 간단하다.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보면 된다. 정부와 학교가 이익을 보는가, 아니면 학생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가? 교육과정 수요자는 학생(사회)이고, 정부와 학교가 공급자라는 사실은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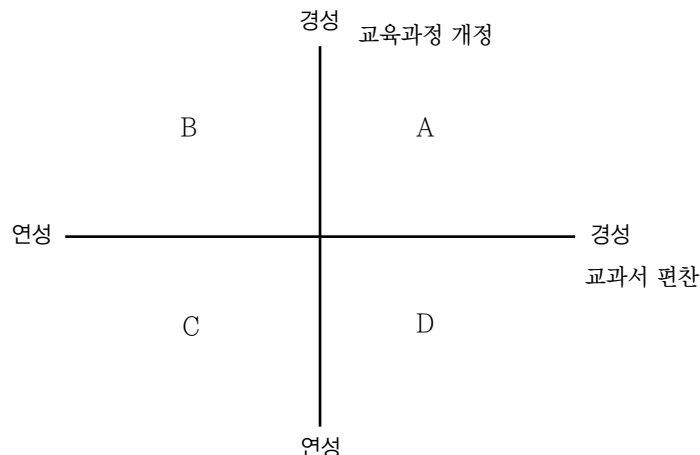
여기서 우리는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목적과 과정 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교육과정은 학생과 사회를 위하여 개정할 것이지,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 또는 상황을 이유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교육과정의 탈정치성(脫政治性)이다. 물

론 이 말에는 다소 어폐가 있다. 지금까지 8차에 걸쳐 교육과정을 개정해 왔지만 어느 정부도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지 않고 모두 사회 상황 변화와 학교 교육의 개혁 발전을 주된 이유로 삼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탈정치성을 새삼스럽게 제기하는 까닭은 지난 교육과정 개편이 대부분 정권 교체기나 크나 큰 정치적 격변기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사실 ‘교육의 탈정치성’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自主性 專門性 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와 교육기본법 제6조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 정신을 개념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와 절차 과정을 분명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란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이며, 절차는 발의부터 결정 고시를 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헌법은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주체와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요자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공급자가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과 사회를 위한 교육과정 정책도 공급자가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과정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그러면 현행 교육과정 관련법에는 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교육 기본법은 “第23條 (教育課程 등) ① 學校는 教育課程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課程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教育監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教育課程의 범위 안에서 地域의 實情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1. 1. 29, 2008.2.29〉 ③ 學校의 教科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교육과정 개정 고시(물론 사전 시안 개발 연구를 거쳤지만)만 하면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헌법 개정에 빚대어 해석해 보자.

헌법은 개정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하면 유형은 경성(硬性)과 연성(軟性)으로 나눌 수 있다. 경성 헌법이란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보다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이고, 연성 헌법은 특별한 개정 절차가 없이, 일반 법률의 개정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이다.¹⁾ 이 개념을 빌려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편찬 정책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책 유형의 극과 극은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편찬 모두 경성인 경우(A)와 모두 연성인 경우(C)이고, 서로 다른 B와 D로 나눌 수 있다. 어느 경우가 ‘올바른 정책’이고, 어느 경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 교육과정 개정 정책은 어느 유형일까? 현재 정책은 경성은 아니고, 연성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개정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헌법과 같은 지위라는 점에서 볼 때, 개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물론, 정부가 교육과정 행정의 편의성과 정치적 상황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개정 규정을 만들지 않았을 리는 없다.

그러면 검정 교과서 편찬은 어떠한가? 현재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편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심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는 사전 공개된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를 한 뒤, 합격 도서를 고시한다. 이 규정은 어느 과정에서도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유해성이 없음을 공인하는 실체적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 개정의 규정과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과 비교하여 그 난도를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개정 고시까지 확정된 명문 규정이 없는 교육과정에 비하여 교과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편찬은 경성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렇게 우리나라 현행 교육과정 개정 체제는 연성 체제이고, 교과서 편찬 체제는 경성 체제라고 분류하였다.²⁾ 문제는 이러한 분류도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과서 선진화를 추동할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가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그 방향을 ‘정부 역할의 최소화-시장 자정성 최대

화’라는 개념 체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II. 교과서 편찬 정책의 발전 방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재 교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지금까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던 규정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08. 6. 30일자 보도) 교과서 편찬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면서 바로 이 사례를 인용한 것은 이것이 향후 교과서 선진화 전략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영재학교에서는 영재에게 맞는 교재를 써야 하는데 만일 정부가 그 결정을 기속한다면 합당한 교재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과서 채택에 관여하지 않고, 학교는 가장 좋은 교재를 선택하여 학습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과서 정책상 ‘정부 역할의 최소화 - 시장 자정성의 최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반계 학교에도 이런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영재학교를 이념형으로 삼자는 논리이다. 그러면 일반계 학교의 교과서 편찬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 주장을 하기 위하여 먼저 두 가지를 보자. 교육과정 개정 정책의 방향성과 정부와 시장의 역할 모형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설명하기로 한다.

교육과정 개정 정책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탈정치성이라는 맥락을 살리고 학교 교육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연성 체제에서 경성 체제로 가기를 주장한다. 이유는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헌법이기 때문에, 정부와 시장은 그 권위를 존중하여 충분한 연구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장기 안정화와 교육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다원사회가 급격하게 변해 가는 시대

에는 학교 교육 내용이 그 상황을 바로 따라가기는 어렵다.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헌법과 같은 교육과정에 수많은 내용을 담아 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은 학교가 반드시 제공해야 될 서비스의 최소 조건만 담아 내고, 그 이상의 실질적인 내용 구성 권은 시장에 넘기자는 뜻이다.

공교육은 국가 미래상을 구축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르칠 내용을 무조건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학교가 반드시 해야 될 최소한의 조건은 제시해 주어야 된다. 교육과정 내용은 현행 과목 규정과 같은 성취 기준 형식이 아니라 핵심 개념 체계만 제시하는 쪽으로 바꾸고, 그 내용 체계는 개정하기 어렵도록 해 놓자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학문 분야의 기본 개념 체계는 바뀌지 않는다. 그 개념 체계만 주어도 교재를 쓰고 교수 학습 상황에서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르치는 범위와 방법 및 학년간 배분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교육과정에 명시하는 것보다 더 실용적 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교육과정의 최소 필수 요건만 제시하고, 그 구체적이고 자세한 구현 방안은 시장에 맡기는 것을 정부 권한의 최소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율성을 살려 나가는 과정에서 자율성에 걸맞은 자기 제어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된다. 자율성은 자체 규율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시장 자율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역기능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시장의 자정성(自淨性)이라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그러면 교과서 편찬 정책의 선진화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용 구성과 편찬 체제 및 선택 과정의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교과서 내용 구성의 자정성을 극대화한다.

교육과정에 있는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

의 범위와 깊이는 저작자가 판단하고, 전개 체제도 어떤 전제 없이 저작자가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한다. 내용의 준거는 교육과정에 두되, 저작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상의 내용까지 실을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의 개방성을 인정해야 된다.

교육과정을 헌법에 비유한다면 교과서는 법률 차원이기 때문에 내용 체계에 대한 역할은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과서 내용 구성을 정부가 심의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이유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모두 빠트리지 않고, 더하지도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교육과정 자체를 최소 내용으로 고시한다면 그 이상의 포함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교과서가 교육적 가치에 반하는 내용을 실어 학생들의 사회 인식과 가치 체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었다. 만약 교과서 시장의 저작자와 사용자 등이 다음과 같은 법규를 제대로 지켜만 준다면 정부가 내용까지 관여할 이유가 없어진다.

교육 기본법 제6조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밀줄 - 필자)

즉, 교과서 저작자가 자신의 이념이니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않고 순수한 교육적 가치만으로 교과서를 저작한다면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도 시장의 자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교과서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저작자의 자율에 맡긴 결과 위 교육 기본법에 반하는 교과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는 시장이 판단하여 정리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의 선생님이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러한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책이다.

이제는 정보가 공개되고 시비 판단을 하는 지적 능력과 윤리적 가치 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시장 경제의 자동 조절 기구로 상정한 ‘보이지 않는 손’과 지나침을 막아 주는 동감(sympathy)의 원리를 교과서 시장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교과서 시장을 자율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정책 과제는 질 높은 교과서를 시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여기서 질 높은 교과서란 교과서 저작 시장의 자정성에 우선 기대야 하지만, 선택 과정과도 바로 연계된다. 학교가 교과서를 선택할 때 내용의 질적 수준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위의 기본법을 어기는 경우는 확실하게 배제시킨다면 질적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과서를 시비없이 공급한다는 것은 바로 채택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채택을 위한 조직 기구를 광역화하여 한두 사람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리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자를 사법 조치하고 당해 교과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발행 정지시켜 버리면 된다. 여기에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말은 시장 체제가 장애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시장 자율화를 하여도 어떤 자작자도 그것을 기화로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할 것이다. 경쟁하에서 지나친 가격은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 정도는 제시하여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과서 시장은 이제 이런 정도의 자정성을 발휘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할 정도의 역량과 문화를 갖추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III. 교육 공동체의 역할 기대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과서 시장의 자율성과 자정성이 높아져야 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관련 권한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은 최소 수준에서 제시하고, 교과서 저

작자가 그것의 범위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도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교과서 저작자는 지금까지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던 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출판 문화와 학자적 양심 및 전문가의 책무성을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 관련 학회와 연구 기관은 정부와 시장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모형을 구안하여야 한다. 교과서 발행사 역시 교육과정을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내용을 담아 낼 수 있는 창의적인 교과서 모형을 개발해야 된다.

학교는 교과서 선택이라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어떤 가치보다 학생의 교육 가치를 최고 전제로 삼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정부는 교사가 교과서 채택시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다른 학문 공동체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현행보다 더 강화시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저작자 및 학교는 모두 교과서를 이용하여 어떤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그 권한을 여법하게 행사해야 된다. **연**

- 1) 헌법 개정이 법률보다 까다롭다는 것은 국회 의결 시 정족수 조건이 더 높고(헌법은 재적 의원의 2/3 찬성으로 가결, 법률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 2)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이런 유형 분류 자체가 공인된 이론이 아니라 필자의 자의적인 틀이기 때문에 유형에 대한 비판은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내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맞춤 수업 2008' 프로그램 안내

글 | 허성만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I. '맞춤 수업 2008' 개발의 필요성 및 특성

예로부터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가르쳐 왔다. 학생들에게 의도하는 무엇인가를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칠 내용과 방법을 학생들의 실태에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6차 교육과정 이후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학습자 중심 교육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의 최종 실천 단계인 교실 수업에서는 여전히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 후 8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교과서 중심으로 교실 수업이 진행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학교 수업은 교과서와 교사용 지침서대로 가르치면 된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깊게 인식되어 있다. 교과 전담제의 도입으로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또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등 5~10개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2개 영역 등 너무 많은 교과목을 혼자서 수업해야 한다는 것과, 학년 중입제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담임 배정의 인사 원칙을 저 중 고학년으로 매년 순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특정 학년의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축적하기가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학급당 학생 수의 과다, 학교 간 이동,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 등이 교실 수업에서 교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게 하여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를 반영한 교실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 수업 2008'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어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맞춤 수업 2008'은

- 명칭 그대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급의 실태에 맞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서, 2008은 2008년 적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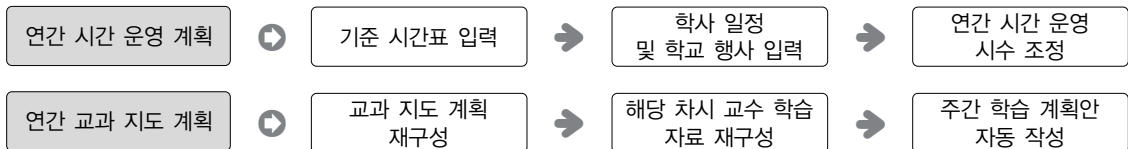
- 부산의 현직 초등 교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사용자 요구 사항을 보완하고 있다.
- 내 수업을 쉽게 계획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16개 시도가 개발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기본 데이터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습 과제의 적합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재구성 방법을 지원하고 있다.
- 내 수업 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업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과목의 매 차시마다 11개의 URL 저장 공간을 마련하였고, 저장된 URL은 원클릭으로 전체 화면에 구현되도록 하였다.
- 메인 화면인 주간 학습 화면을 통하여 준비된 수업을 구현할 수 있고, 수업의 유의점이나 수업 후의 개선점을 기록하며 저장할 수 있는 수업 노트 공간을 차시별로 지원하고 있다.
- 모든 자료는 내보내기과 불러오기 기능을 부여하여 수업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고, 누적·보존하여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 '맞춤 수업 2008'의 기능 및 활용


1. '맞춤 수업 2008'을 활용하여 내 수업 계획하기




기준 시간표 입력, 학교 학년 학급 행사 입력, 연간 시수 조정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간 시간 운영 계획을 내 수업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 연간 교과 지도 계획에 따라 창의적인 교육 활동, 교과별 지도 내용, 시기, 지역화 등 학습 과제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지도 계획을 학급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 내 수업 계획 절차



(나) 내 수업 계획을 위한 주요 기능

기능	실행 내용	'맞춤 수업 2008' 실행 화면
기준 시간표 입력	· 학년 및 반별 전담 시간, 특별실 사용 시간을 참고하여 반별 기준 시간표를 입력하는 단계 (주별, 기간별로 설정하여 시간 표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이 가능)	

기능	실행 내용	'맞춤 수업 2008' 실행 화면
행사 입력	· 학사 일정과 행사일 시간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휴업일, 학교 학년 학급 행사 등 연간 행사를 입력하는 단계(수립된 연간 학교 행사를 입력하며, 입력된 행사 계획은 필요 시 수정이 가능)	 <p>행사 입력 화면은 상단 탭 메뉴(행사, 휴업일, 학급, 학년, 학과, 과목, 교사, 학생, 학부모, 교사, 학생, 학부모)와 연도(2008)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앙에는 달력 뷰와 일일 행사 입력 폼이 표시되며, 오른쪽에는 행사 상세 설정(행사명, 일시, 장소, 담당자 등)을 입력할 수 있는 폼이 있습니다.</p>
연간 시수 조정	· 기준 시간표와 입력된 행사 자료로 연간 시수 확보를 확인하고 조정하기 · 각 교과별 기준 시수와 실제 시수 검토(각 주별 시간표 수정 가능)	 <p>연간 시수 조정 화면은 '연간 기준 시수'와 '연간 실제 시수'를 비교할 수 있는 표를 제공합니다. 표에는 교과, 학년, 학급, 기준 시수, 실제 시수, 차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각 교과별 시간표 수정을 위한 버튼이 있습니다.</p>
교과 지도안 재구성	· 기본으로 제공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급 단위의 교과 지도 계획으로 수립하기(재구성된 교육과정은 학교 학급의 상황에 맞게 필요 시 수정 가능)	 <p>교과 지도안 재구성 화면은 국가 교육과정(1~6학년)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앙에는 교과별 학습 목표, 내용, 평가 방법 등을 입력할 수 있는 폼이 표시되며, 오른쪽에는 교과별 학습 목표, 내용, 평가 방법 등을 입력할 수 있는 폼이 있습니다.</p>

(다) 계획된 내용 출력 기능

계획된 연간 시간 운영 계획, 연간 시간표, 진도표, 교과 지도 계획 등을 한글 2005로 편집 저장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교육과정 시수 및 지도 계획을 확인, 조정할 수 있다.

2. '맞춤 수업 2008'을 내 수업에 활용하기

계획된 지도 계획에 따라 학급별 주간 학습 계획안을 자동으로 작성 활용할 수 있고, 주간 학습 계획에 따

라 교과별, 차시별 교수 학습 지도안, 수준별 학습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원 클릭으로 활용하여 내가 의도하는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가) 내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



(나) 내 수업 활용을 위한 주요 기능

기능	실행 내용	'맞춤 수업 2008' 실행 화면
주간 학습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의 단원, 주제, 중점 내용, 학습 준비물, 예습 과제 등 주간 학습 계획을 자동으로 작성 활용 기존 시간표를 토대로 주별 또는 일별로 주간 학습 안내를 편리하게 재구성할 수 있음. 	
교수 학습 자료 원 클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 학습 안내 화면 각 차시의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면 수업 지도안, 학습지,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지 등을 바로 활용 교사 개인별 자신의 수업에 맞는 자료를 추가, 삽입할 수 있고, 이를 다른 교사들과 공유할 수 있음. 교수 학습 자료의 내보내기와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우수 자료 공유 가능 	
수업자 의견 달기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차시별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메모 가능 사전 교재 연구 노트의 역할과 아울러 수업 후의 개선점 기록으로 교사 개인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다) '맞춤 수업 2008' 간이 활용법

- 1) 학급별 기준 시간표만 입력하면 주간 학습 안내에서 차시별 교수 학습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2) 교과 지도안 입력 수정에서 원하는 차시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른 후 교과 관련 자료 링크에서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Ⅲ. 많은 활용을 기대하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에 1, 2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부분 개정이라고는 하지만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교실 현장에서는 전면 개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의 학교 자율권이 강화되고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과 교육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교육과정 중심 교육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위 시간의 수업에서 교과서만 들여다보면서 첫 페이지에서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루는 교과서 중심 교육 운영 체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다행히 부산교육청이 개발 보급하는 '맞춤 수업 2008'은 이런 점에서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적극 권장하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에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를 내 수업에 맞게 선택하여 수업 제재별로 링크하여 원 클릭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점과, 사용한 자료를 수업 제재와 함께 저장 보관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점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수 학습 자료 활용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맞춤 수업 2008'의 프로그램 탑재 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맞춤 수업 2008'의 운영 환경 및 프로그램 탑재 처

- 하드웨어 : CPU 펜티엄 4, 메모리는 256M 이상
- 소프트웨어 : 윈도우 xp, 서비스팩 2와 한글 2005
- 프로그램 탑재 처 : 맞춤 수업 지원 사이트(<http://gaia.busanedu.net/~gifted02/>) / 자료실 / 5번의 첨부 파일 2개
- 업데이트 : '맞춤 수업 2008' 프로그램 실행 시 '자동 업데이트 실행'
- 사용자 매뉴얼 및 활용법 동영상 자료 : 부산교육연구정보원 / 교육 연구 / 연구 학교 / 화잠초등학교 반안초등학교 연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광주 : 한울사.
- 부산광역시교육청(2007),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수 자료.
- 부산광역시교육청(2008), '맞춤 수업 2008'의 사용법과 학교 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제.

교과서 발행 제도의 개방화와 자율화



글 | 이해영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지식 정보 사회의 도래는 교육에 많은 과제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직업세계가 불안정한 미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 세대가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선택 사항들 중에서 현명하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립적이며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 고도의 지적 능력 계발이 크게 요청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기성세대가 성취한 탐구의 결과나 기존의 지식을 그대로 습득하기 보다는 적절한 탐구 과정을 거쳐 타당한 결과에 이르게 하는, 사고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교육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한 바, 무엇보다도 교과서의 내용이 사고력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 다양한 사고방식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 제도가 열려 있어야 한다. 교과서 발행이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묶여 있으면, 그러한 교과서를 통해 길러지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획일화하기 쉽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창의력 신장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교과서가 획일화되

어 있거나, 교과서의 내용이 일정한 방향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창의성은 잘 길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습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저술된 교과서를 접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을 특정 제도에 고정시키지 말고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의 교과서 발행 제도 아래에서는 각 과목별로 교과서 단행본 이외에 이렇다 할 부교재나 시청각 교재가 개발, 보급되기 어렵게 되어 있어 학생들이 학습의 촉진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감각 중 주로 시(視) 감각에 의존하도록 하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 공학의 발달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전수하는 과정에서 다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넓게 열어 놓고 있다. 컴퓨터, 소형 전자 기기 등의 첨단 정보 통신 매체는 인쇄 매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미 성장 세대는 인쇄 매체보다 영상 매체에 익숙하고 멀티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발행 제도는 다감각 매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과서 발행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 교과서와 교재의 다양화

현행 교과서 정책 아래에서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다양한 학습 자료 또는 보조 교재가 개발 활용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하여 학교 수업은 공식적으로 단행본 교과서에 의존하고 있다. 학습자의 특성이나 교과 특성에 관계없이 단행본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수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효과적이다.

첫째, 교과서는 불가피하게 내용을 선정해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관한 지식을 모두 제시해 줄 수 없으며, 새로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도 없다.

교과서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차나 지역차를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 단 하나의 교과서로 다양한 능력 집단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우수 학생에게는 심화 학습 자료가, 부진 학생에게는 보충 학습 자료가 요구된다. 개인차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교재의 개발은 학생 각자의 흥미, 능력, 필요에 적합한 개별 학습을 가능하게 해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요체가 된다. 이러한 자료의 개발은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교과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자료의 형태는 낱장의 분리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 등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래의 인쇄 자료 이외에 시청각 자료 및 첨단 정보 통신 매체를 활용하는 자료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어 음악 외국어 교과에서 말하기, 듣기 지도를 위해 녹음 재생이 가능한 청각 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사회 과학 실업 교과에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 첨단 정보 통신 매체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관련 전문 연구 기관이나 업체에 적극 권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계획'이 현실화되면 인쇄 매체 중심의 교과서 개념이 자연스럽게 컴퓨터 및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용 콘텐츠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것이다.

셋째, 교과서의 형태와 편집 방법을 천편일률적으로 통일하지 말고 교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한다. 지금처럼 교과 내용을 압축하거나 난해한 용어를 제시하지 말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하며, 풍부한 삽화와 사진, 도표를 신는 방식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 학년별 위계가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일부 교과에 한해서는 매 학년 교과서를 개발하지 않고 2~3개 학년 공용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문, 예 체능, 도덕, 국민 윤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과목에 따라서는 교과서 대신 컴퓨터 보조 학습(CAI) 프로그램, 모듈이나 실험 실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교과서와 교재가 제작,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발상이 쉽게 투입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교과서 발행 제도는 관련 규정의 경직성과 관료적인 운영으로 인해 혁신적인 방법에 의한 교과서 및 교재 발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국정이든 검정이든 정부가 교과서 체재, 판형, 분량, 가격 등 미시적 결정에 속하는 사항에까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쉽게 획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교과서 발행 방식을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교과서 출판업계,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과서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과서가 수업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하는 교과서관이 통용되어 왔다.
이런 교과서관 아래에서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구분되지 않고 동일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교과서 출판 관련 자율 단체, 교육 연구 기관 등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 발행에 관한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을 위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개방과 자율을 기조로 하는 교과서 발행 제도 구축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과서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과서가 수업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하는 교과서관이 통용되어 왔다. 이런 교과서관 아래에서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구분되지 않고 동일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구분되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표현해 놓은 하나의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각급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공포한 것이며,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기초해서 실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배우기 쉬운 형태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 즉,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풀이해 놓은 자료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구성 양식은 교육과정을 해석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교육과정이라 하여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해석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교육의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적절히 포용

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국정제와 검정제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교육 내용 선정 조직 및 수업 계획 수립에 있어 여러 대안들이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획일적인 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국민의 정부 이후 교과서 발행 제도의 자율화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교육 내용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 사회 각 부문에서는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도 다원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그 도를 더해 갈 것이다. 특히, 다가오고 있는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지식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상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래 사회에서 살아갈 학생들이 특정한 내용과 사고방식에만 불박히도록 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식과 가치가 점점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가치로운 지식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하나의 교육 내용을 해석하는 방식도 그것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주된 교재로 쓰이고 있는 교과서도 다양한 내용과 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교과서는 개인 간 또는 집단

**학습자들이
편향적인 교과서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급적 다양한 관점에서 저술된 교과서나 교재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 침해한 신념과 가치관의 대결과 갈등의 장이 될 수 있다. 최근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만든 경제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이 점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이처럼 교과서가 침해한 신념과 가치관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편향적인 교과서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급적 다양한 관점에서 저술된 교과서나 교재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정제를 점차 검정제로 전환하고, 종수는 많으나 내용은 비슷비슷한 교과서가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제시될 수 있는 교과서가 만들어지도록 검정 교과서에 관한 각종 규제적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개방의 속도를 보아 가면서 중국적으로는 자유 발행 제도 도입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데에는 교과서 발행을 개방할 경우 출판업계의 지나친 영리주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각과 업계가 좋은 교과서 및 교재를 개발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교과서 발행에 관한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 부문의 다양한 전문 인력과 업계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보다 질 높고 혁신적인 교과서와 교재가 개발,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 산업계가 교과서 발행의 개방화에 대비하여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업계의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련 업체들이 자율 기구를 구성하여 자정 노력을 강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연**

Ⅲ. 교육 산업의 육성

교과서 발행에서 국정제가 폐지되고 검정제가 확대되면, 더 나아가 자유 발행제가 도입되면 전문성을 갖춘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등장으로 교육 산업이 활성화되고 자유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한 교과서 질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출판사들의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 제도가 정부 주도로 운영되어 온



글 박옥경(전 오슬로대학교 교수, 현 노르웨이 법무부)

노르웨이의 교육과 교과서 제도

1. 머리말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3국 중의 하나로 4백 6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특이한 것은 공용어가 두 가지라는 것이다. 북크몰(Bokmaal)과 니노스크(Nynorsk)라는 두 개의 언어가 공용어이며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기가 선택하는 언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류와 문서도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도 동시에 두 가지 언어로 발행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러한 두 가지 공용어 중에서 자기가 선택한 언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노르웨이 교육법 Opplæingsloven의 제9조와 교육법시행령 제 17조)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법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노르웨이의 교육 정책의 근본은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배경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전부에게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원칙에 있다. 학교는 지식과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은 물론 사회 내에서의 유동성을 장려

하고 부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지의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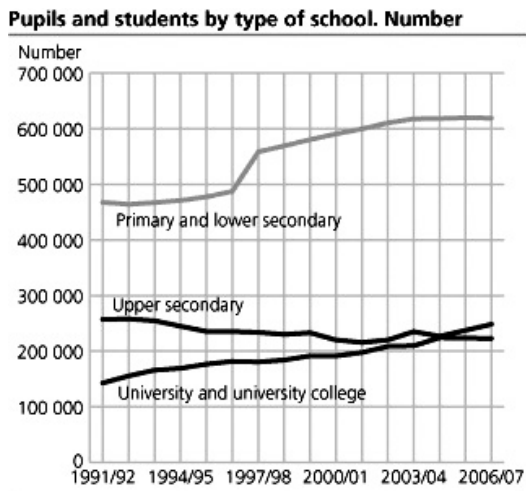
노르웨이 학교에서의 교육은 각 학생들 개인의 능력과 실력에 맞추어진다. 장애인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특수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하여 수화를 제1언어로 하는 교과 과정이 개발되어 있다.

노르웨이 국회(Storting)와 정부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 목표와 예산안을 기획하고 확정할 책임을 가진다. 교육 연구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는 교육 관련 문제를 관장하는 행정 기관이며 국가의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책임을 갖는다. 노르웨이의 교육 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변화와 발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여러 차례의 교육 개혁을 시행하였다(최근의 경우인 1994년, 1997년 2006년).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교육 개혁은 2006년 가을에 노르웨이의 정부와 내각이 교체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식 증진(Kunnskapsløftet)’을 지향하는 교육 개혁 프로그램으로서 노르웨이

교육 역사상 최초로 13년 과정의 기본 교육과정을 포괄하는 개혁이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노르웨이 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개요를 살펴보았다. 다음 부분에서는 노르웨이의 기본 교육 제도와 교과서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노르웨이의 교육 제도

노르웨이의 아동 교육은 173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초기인 1889년에 초 중등 교육과정이 7년으로 고정되었다가 1969년에 9년으로, 최종적으로 1997년에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노르웨이의 의무 교육은 10년이며 7년의 초등 과정(Barneskole)과 3년의 중등 과정(Ungdomsskole)으로 나뉜다. 고등학교 과정은 3년이며 선택 과정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입학하는 취학 연령은 6살이다. 노르웨이 전국에 약 3,250개의 초 중등학교가 있으며 학생들은 약 620,000명이다. 초 중등학교 과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등한 교육과 개인에 맞추어진 교육이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공통된 커리큘럼에 의해 조성되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공통된 문화, 지식 그리고 가치 기준을 소개한다.



자료 : 노르웨이 통계청

모든 지방 자치 단체와 도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이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는 도 행정 기관의 교육 당국에 있다. 초 중등 과정의 학교를 운영하는 책임은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있으며, 고등학교의 운영은 도에서 맡는다. 또, 모든 지방 자치 단체는 수업 전후 시간을 위한 학생들의 교내 활동 프로그램(SFO-skolefritidsordning, 즉 경제 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오전에 수업이 시작되기 전과 오후에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 유료로 운영되며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한다.)을 초등학교 과정의 1학년부터 4학년 과정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나이와 신체적 능력과 관심 분야에 적합한 놀이, 문화적 오락 활동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도 유익한 발달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적인 커리큘럼과 교육령이 노르웨이의 초 중등 교육과정의 목표와 원칙을 규정한다.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기독교에 관한 지식과 종교적 윤리적 교육
- 노르웨이어
- 수학
- 사회
- 미술과 공예
- 자연 과학
- 영어
- 외국어 / 언어 심화(중등 과정)
- 음악
- 식품과 건강
- 체육
- 선택 과목(중등 과정)

노르웨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과정 사이의 모든 능력 형성을 포괄한다. 1994년에 제정된 법에 의하여 16세에서 19세 사이의 모든 사람들은 3년 과정의 고등학교

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학교의 소유주인 지방 자치 단체나 도에서 구입 비용을 부담한다.

....

2007년부터 고등학교의 교재도
무료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여해 주는 것으로 제도가 변화되었다.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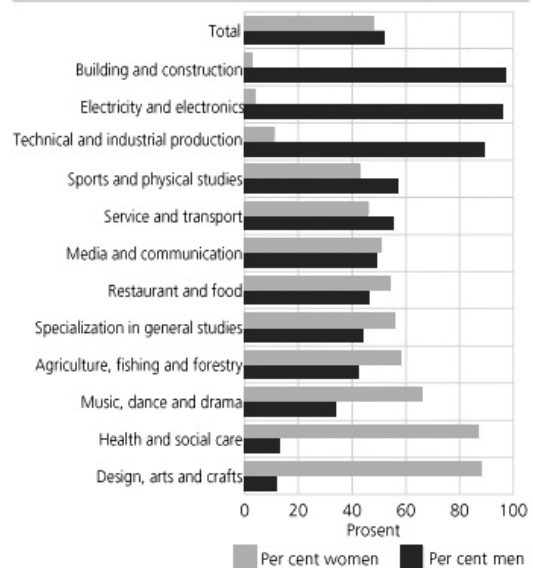
고등학교 과정은 상급 학교 교육 이수 자격, 상
업 면허증, 직업 자격증 또는 기본적인 수준의 자
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누구나 다 자기
가 신청한 기본 과정 중의 한 과정에 입학할 수 있
는 권리가 있으며, 그 기본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2년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실습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별 수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학업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2년간의 별도의 고등 교육
과정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2006년 가을 학기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
은 총 12개 계열의 다음과 같은 학업/실습 과정
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다.

- 스포츠와 체육 교육
- 음악, 무용 그리고 드라마
- 전문가 과목
- 건축과 건설 기술
- 디자인과 공예
- 전기 부분
- 건강과 사회 복지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 농업, 어업 그리고 임업
- 식당과 식품 유통업
- 서비스, 운수 그리고 통신업
- 공업과 산업 생산

Pupils in Vg1 in upper secondary education, by gender
and education programmes. 1 October 2006. Per 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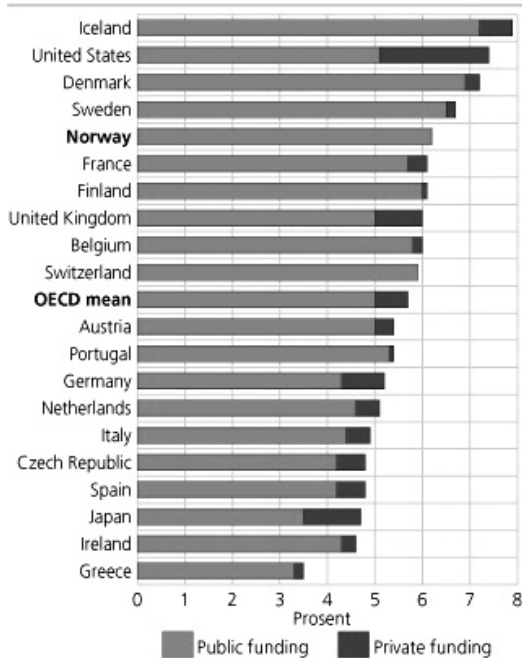
3. 노르웨이의 교과서

노르웨이의 초 중등학교에서의 교육은 무상 원
칙에 의해 운영된다. 이러한 무상 교육의 원칙은
노르웨이 교육법 Opplæringsloven의 제2-15조
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무상 교육의 원칙에
의해서 학교의 운영을 책임지며 소유하는 지방 자
치 단체는 교과서를 포함한 수업 교재, 정규 학교
시간내에 초 중등학교 교육의 일부로 학교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업 관련 또는 사교적인 활동에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도

록 되어 있다.

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학교의 소유주인 지방 자치 단체나 도에서 구입 비용을 부담한다. 원래 고등학교 학생들은 본인 부담으로 교과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관계로 매년 학년이 끝나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사용한 교과서를 팔고 사려는 고등 학생들이 고정된 장소에서 서로 만나 책을 구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고등학교의 교재도 무료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여해 주는 것으로 제도가 변화되었다.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OECD countries, as a percentage of GDP for all levels of education and by type of funding, 2004¹



¹The countries are ranked by descending resource uses in total. Detailed notes are available at www.oecd.org/edu/eag/2007
Source: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6.


자료 : 노르웨이 통계청

노르웨이의 초 중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과서는 2000년 6월까지의 국립 교육 자료 센터(Nasjonalt læremiddelsenter)에서 인준을 받도록 되어있었다. 이러한 교과서 공인 제도는 2000년에 노르웨이의 국회(Storting)에 의

해서 폐지되었다. 이러한 교과서 공인 제도의 폐지의 결과로 교과서 출판과 선정에 따른 자유 시장 상황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출판사도 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으며, 교과서의 선택은 커리큘럼에 따라 담당 교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로 선택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은 교재가 노르웨이의 두 가지 공용어로 모두 출판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과서가 언제 출판되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돕기 위해 www.skolebok.no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들은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교과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교과서 제도는 무료 교육의 원칙에 의해서 학교의 소유주가 경제적인 부담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칫 교재의 질적인 면보다 경제적인 면이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 교과서 선택에 있어서 교사의 결정권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이와 관련되어 로비나 부정부패를 낳는 잠재적인 요소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참고 문헌

- www.udir.no
- www.regjeringen.no
- www.dagbladet.no
- www.norway.or.no
- www.sprakrad.no
- www.ssb.no
- St.meld.nr.31(2007-2008) : Kvalitet i skolen
- Stokker, Valeska W. (2007) : Refleksjoner over bruken av læremidler i et samfunnsfag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되어야

— 초등사회과 경제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

글 조현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 대부분은 사회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사회 교과가 어려운 이유는 사회 교과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쉽고 재미있는 사회 교과서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사고 발달 과정을 고려한 사회 교과서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싶다. 그리고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을 앞두고,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 현행의 초등학교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경제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보다 나은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먼저 교육과정 분석에서 편제를 보면 사회과의 명칭이 사회 생활에서 사회로 변경된 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경제 교육도 경제라는 별도의 교과목 명칭 없이 사회과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간 배당을 보면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 등의 진입으로 연간 수업 시간 수가 점점 감축되었다. 특히, 현재 5, 6학년의 연간 수업 시간 수는 제 6차 교육과정 이전과 비교해 볼 때 34시간 감소되어 민주 시민의 자질을 배양하는 사회과 교육의 목적 달성에는 시간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수 확보가 요구된다.

교과서 분석에서는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종합 및 행동 영역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 설정을 위해 먼저 기본 개념을 검토하였다. 기본 개념은 미국경제교육협회(NCEE)에서 제시한 ‘기본 경제 개념 틀’이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틀을 원용하였다. 이 틀은 모두 6개의 경제 개념군(기초, 미시, 거시, 국제 경제, 측정 개념과 방법, 광범위한 사회 목적들)을 두고 그 밑에 36개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준에 적합하다고 본 19개 기본 개념을 추출하여 현행 교과서 내용과 비교해 본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 기본 개념을 분류하는 경제학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다소 다르나 NCEE의 분석 준거에 따르면, 6개 개념군 가운데 기초와 미시 개념은 충실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거시, 국제 경제, 측정 개념과 방법 등은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민주 시민성이 배양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념들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이 개념군의 교과서 삼입이 필요하다. 또, 이론 경제학에서 가격론과 가격 결정되는 변수인 수요와 공급, 그리고 국민 소득론은 미시와 거시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인데 이들의 개념 정의나 이와 유사한 설명들이 교과서 내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와 학자들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 마인드와 경제적 가치를
심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여 보급해야 하며,
학생들의 사고 발달 과정에 충실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둘째, 교과서의 내용 및 교수 학습이 학생들의 생활 주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과거 이론 중심에서 많이 탈피하였으나 아직 우리 어린이들의 눈높이 수준에서 즐겁고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학습의 장이 부족하여 학생들 자신의 것으로 체화된 경제 마인드(economic mind)를 심어 주기에 미흡하다. 미국이나 네덜란드, 덴마크와 같은 경제 선진국의 경우, 학교 경제 교육에서 초기에 사업가 및 창업가 정신을 심어 주고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경제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체험 학습의 기회가 확대되면 아이들이 경제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스스로 경제 주체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아이들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우리의 학교 경제 교육이 일부이긴 하지만 가계부 기입 요령을 통해 소비 및 저축 근검절약의 정신을 심어 주는 소비 위주와 소비자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기업가를 초기에 길러 내는 생산 위주의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넷째, 생산성 개념에서 내용 기술상의 문제점은 특화 개념을 단순히 특정 시 도의 특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자연 자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국한하였을 뿐 특화가 생산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술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각 시 도의 자연 자원으로 특산물을 생산한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산성 측면에서 기술해야 한다. 분업의 경우, 4학년 단계에서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분업의 개념만을 이해시키는 수준에서 다루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분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다섯째, 직업 개념의 경우 미래에 유망한 직업에서 기업가와 창업 정신과 관련된 직업 소개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중의 하나는 뛰어난 최고 경영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술 개발의 개념에서 기술 개발이 제품의 질 향상과 양의 증가도 함께 온다는 사실과 기술 개발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여섯째, 물물 교환의 개념 설명은 잘 되었으나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점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화폐 개념에서는 화폐의 본원적 기능인 교환의 매개 수단만 강조된 나머지 그 외 기능들이

생략되었다. 한편, 상호 의존의 경우에 특화와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사실도 이해시켜야 한다.

일곱째, 미시 경제 개념들 가운데 시장 개념은 광의의 시장 개념의 설명이 부족하며 가격의 경우 희소한 자원과 재화의 배분 역할을 하는 가격 개념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격이 생성되는 두 변수인 수요와 공급의 개념 정의가 없다. 경쟁과 시장 구조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할 때, 단순한 판매 경쟁과 생산 경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덟째, 소득 분배 개념에서 생산 요소의 양과 질 차이에서 소득 격차가 생긴다는 사실과 노동만이 소득원이 아니라 은행이자 수입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정부의 역할의 경우, 공공재를 순수과 준공공재로의 구분이 필요하며 공공 시설만이 공공재가 아니라 각종 공공 서비스도 공공재임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아홉째, 경제 교육의 기능 영역 목표와 관련된 것으로서 표와 도표, 그래프는 경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개념들이다. 이들은 사회 조사 능력과 자료 분류 능력 등 사회 참여 기회를 갖게 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요구된다.

끝으로,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미국이나 독일처럼 경제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으며, 학교 경제 교육 발전을 위한 민간 단체나 기구들이 자생적으로 생겨 경제 교육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경제 교육 활성화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또, 경제 전문가와 학자들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 마인드와 경제적 가

치를 심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해야 하며, 학생들의 사고 발달 과정에 충실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연**

☞ 참고 문헌

- 박인현(2001), 제7차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 교육, 교육과학사
- 안병근(2001), “초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 교육 내용의 검토”, 『초등사회과 교육』 제13집, 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 최병모(2000),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경제 교육 편성과 운영”, 『경제 교육』, KDI 경제정보센터.



글 **진재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21세기형 교과서의 특징

1. 머리말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수 학습의 기준이 된다. 그리하여 국가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나서 이를 토대로 교과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작된 교과서에 의지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그러므로 교육과정보다 교과서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국가는 교과서의 제작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고 있다.

우수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쉼 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나,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교과서가 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 글은 21세기형¹⁾ 미래 지향적 교과서의 특징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방향을 검토해 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이 미래 지향적 교과서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21세기형 교과서의 특징을 전통적 교과서의 특징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21세기형 교과서의 특징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교과서의 특징이 21세기형 교과서와 완전

히 구분되고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 교과서도 많은 면에서 21세기형 교과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21세기형의 교과서도 전통적 교과서의 특징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단지 편의상 21세기형 교과서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교과서를 ‘전통적 교과서’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2. 우리나라의 교과서 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에 대한 엄밀한 규정을 두어 국가 교육의 수준과 범위, 방향을 규제하고 있다. 즉, ‘초·중등 교육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국가에 의해 심사나 심의를 통과한 것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내용, 수준과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의존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의존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소략하고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에 비해, 교과서는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서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과서에 의존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또,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교과서의 내용만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만큼 교과서는 현장 학교 교육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도 교과서에 근거하여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시험들도 전적으로 교과서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 변동 속에서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교과서는 아직도 가장 주요한 교육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학생의 학습 능력과 창의력 신장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다양한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기 위해 검 인정 제도 확대, 다양한 형태와 매체로 구현된 자료 개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과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학습이 가능한 교과용 도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질 높은 교과용 도서’를 위해 별도의 상업용 참고서 없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용 도서, 아름답고 견고하며 실용적인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3. 21세기형 교과서의 특징

미래 사회는 지식 산업이 주축이 되는 정보화 사회,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른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 생활 양식, 가치관 등이 다양화된 다원화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이는 지구촌 사회, 과학 기술 문명을 넘어서 종교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인간 중심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정보 통신 기기에 의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교육, 학습 관리자로서의 교사 역할 전환, 교육 관료들의 영향력 증대 등의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21세기형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 이 특징들은 현재 교과서가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앞으로 새롭게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21세기형 교과서의 특징으로,

첫째, 구성주의 교육 이론에 근거하여 제작된 교과서이어야 한다.

1980년대부터 교육 이론으로 주도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구성주의 교육 이론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 이론으로 기존의 객관주의 교육 이론을 대신하고 있다. 이 교육 이론은 학생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지식이 학생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으로, 학생의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활동으로서의 객관주의 교육 이론을 대신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이론으로서 각광받게 되었다.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속에서, 교과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신장시켜 주는 구성주의 교육 이론에 바탕을 두어 제작된 교과서이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가 포괄하는 내용 범위는 최대 기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교과서가 최소 기준에 따라 내용을 담을 것이냐 최대 기준에 따라 내용을 담을 것이냐에 따라 교과서의 모습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소 기준을 담을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교과서가 구성되면 학생들의 다양한 학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최대 기준에 따라 내용을 담을 경우는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급변하는 사회 변동 속에서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교과서는
아직도 가장 주요한 교육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학력의 차이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이 가능하다. 미래 사회는 개별화된 교육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교과서도 최대 기준에 따라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교과서는 서책형만이 아니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교과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서책형에 의존하는 교과서로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없게 된다. 발달된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이나 동영상 자료, 사진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책형이 가지고 있는 지면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교과서는 자료집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현재 학생들은 이미 무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무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정리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자료집형 교과서는 학생들이 자료를 선택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심과 흥미,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개별 학습과 자기 주도형 학습이 가능

하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주어진 지식의 내용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가는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교과서는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는 매뉴얼형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과서는 정리된 학문 체계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학생들은 이를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교과서에 담을 수 없는 오늘날에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기존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매뉴얼형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과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활동을 고무하는 확산형으로 꾸며져야 한다.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별화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단일한 지식의 내용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의 경험과 지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확산형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교과서는 탐구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교과서가 지식 체계의 암기와 이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구

교과서 다양성의 확대와
교과서 자율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전제 조건이 된다.
즉, 교과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는
교과서 검정제의 확대를 들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교과서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탐구형 교과서는 구성주의 교육 이론에 바탕을 둔 교과서와 맥이 닿아 있다. 이와 같은 21세기형 교과서의 특징으로 제시한 일곱 가지는 현재 교과서가 이미 많은 항목에서 변화해 가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미흡하여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미래 지향의 교과서 방향이 기도 하다.

이와 같은 21세기형 교과서의 특징을 전통적 교과서의 특징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전통적 교과서와 21세기형 교과서의 특징 비교

구분	전통적 교과서	21세기형 교과서
교육 이론	객관주의	구성주의
내용 범위	최소 기준	최대 기준
자료 유형	서책형	멀티미디어형
구성 형식	요약집	자료집
제시 방식	결과 전달형	매뉴얼형
구성 방향	수렴형	확산형
학습 유형	지식 이해형	탐구형

4. 맺음말

교과서는 국가 교육의 수준과 방향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자료이다. 그리고 교과서가 다양한 학습 자료의 하나로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학습 자료이다. 그러므로 각국은 우수한 교과서를 만들어 공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우수한 교과


서를 만드는 데는 방향 제시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 다양성의 확대와 교과서 자율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전제 조건이 된다.

즉, 교과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는 교과서 검정제의 확대를 들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교과서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을 평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평가 방식이 다양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평가자의 다양한 평가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방식의 경직성은 곧이어 교과서의 경직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을 평가하는 출제 문항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지 여부가 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교과서는 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평가 방식의 활용은 다양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되지만, 다양한 교과서의 제작과 보급은 다양한 평가 방식의 활용을 유도할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교과서 검토에서도 검토를 통과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곧 수익에 직결되도록 하는 형태의 교과서 공급과 수익 분배 제도도 정비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김재복 허경철 김만곤 박민정(2006),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 보고 06-1.
- 이용숙 김영미 전영미(2002), 교과서 내용 구성 및 체제 개선의 방향성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열린교육 연구소, 2002년도 교육과정 후속 지원 연구 과제 답신 보고.
- 진재관(2006),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변천과 전망, 교과서연구 제47호, 25-30,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진재관 서지영 김국현 이난영(2007), 교과용 도서 평가 연구(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C 2007-5.
- 허경철 김왕근 김홍원 박경미 최돈형(2000),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의 과다 정도 및 난이도 수준 분석 연구.
- Chambliss, M. J. and Calfee, R. C.(1998), *Textbooks for Learning*, Massachusetts : Blackwell Pub.
- Gerald M. Nosich(2005), *Learning to think things through*, Pearson Prentice Hall, Ohio.
- Kitao, K. & Kitao, K. S.(1999), *Selecting and developing teaching/learning materials*, TESL Web Journal [electronic journal], January 24, 1999.
- Stephen J. Ball ed.,(1990), *Foucault and education : Disciplines and knowledg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 본 연구자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과서를 상정하여 '21세기형 교과서'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현행 교과서가 지향하는 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내(忍耐)와 극기(克己) 기준 커디란 보람

글 류충현 ((주)금성출판사 교과서편집부 국어팀 부장)

▣ 절치부심(切齒腐心)의 기간

“학원 교재는 참고서 개발 경력자가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자네밖에 없지 않은가?”

2000년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가는 시기에 팀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 금성출판사로 이직을 한 나는 못내 서운함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사실 나는, 전 직장에서 국어 과목은 검정 출원을 하지 않는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국어 생활, 화법, 작문, 독서, 문학 등과 같은 고등학교 일반·심화 선택인 국어 과목의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팀장은 참고서 개발은 시장 여건이나 현장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는 개발하기 곤란한 업무이므로 학습 참고서 개발 경험이 많은 내가 맡아서 하라고 제법 타당한 명분을 내세워 나를 설득하였다. 사실 6명인 우리 팀원 중에서 과장이었던 나를 제외하고는 학습 참고서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신입 사원들이기는 했다. 회사가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아는지라 아쉬움을 삼킨 채 국어 생활 교과서 개발 대신 참고서 개발 업무를 하기로 했다.

나에게 맡겨진 참고서 개발 업무를 하는 동안 어느새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지나가고 있었다. 12월 검정 출원일이 한 달 남짓 남은 11월 중순경, 중학교 1학년 국어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그리고 학원용 교재를 마무리한 나는, 그동안 신입 사원이 진행을 한 국어 생활 교과서를 검

토하라는 팀장의 말을 듣고 몹시 기뻐다. 일주일 정도 교육과정과 편찬상의 유의점을 탐독한 후 그때까지 만들어진 국어 생활 교과서를 비교하면서 그간 아쉬웠던 마음을 달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고양시켜주는 요소, 심화·보충에 어울리는 난이도 차별, 창의적인 구성 체제,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 활동 등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개성적인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사례라고는 없는 지리멸렬한 독본 체제의 내용이 어쭙지 않은 삽화와 억지스럽게 판을 구성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교과서의 문제점을 팀장과 대표 저자에게 제시한 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개고를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전혀 엉뚱한 일로 인해 나는 그 교과서의 검정 출원하는 것조차 볼 수 없었다. 어이없게도 그 교과서를 진행하던 진행자가 날밤을 새워도 모자라는 시기에 철야는커녕 야근도 하지 않고 정시 퇴근을 고집했기 때문에 내가 그 교과서 진행을 맡아서 하다가 급기야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4~5개월 참고서 제작을 위해 계속 야근을 하던 끝에 휴식도 없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과서를, 그것도 검정 출원 한 달 여 앞둔 시점에 다시 개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국어 생활 교과서는 원래 진행자에 의해 마무리되어 제출하였으나 아쉽게도 검정

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그때 팀장이 나에게 한 말은 아직도 생생하게 내 귀에 맴돌고 있다.

“검토 과정에서 류 과장이 쓰러진 이유를 알겠네.”

▣ 고진감래(苦盡甘來)의 시간

“화법, 작문, 독서, 한문, 고전 등의 진행자는 정해졌는데, 정작 중요한 문학 교과서 진행자는 아직 못 정해서 걱정이야.”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다시 출근을 한 나에게 팀장이 조심스럽게 한 말이다. 심화 선택 교과목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분량도 많은 문학 교과서를 나에게 맡기려 하나, 건강이 걱정되어 한 말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나 교과서 작업을 하고 싶어 했던가.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좋지 않았던 건강은 휴식을 취하면서 말끔히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그동안 내가 원했던 교과서를 내 손으로 직접 처음부터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흔쾌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해서 그토록 원했던 교과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문학 교과서의 집필자와의 계약은 이미 되어 있었다. 그런데 800쪽이나 되는 분량의 문학 교과서 (상), (하) 두 권을 집필하시는 저자분이 두 명이라는 사실이 약간은 의아스러웠지만 대표 저자의 요구가 그러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선 교육과정을 철저히 분석하는 작업과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바람직한 교과서는 다양한 사실과 사례를 제시하고, 지식 요약보다는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이른바 실생활 경험과 학생 중심의 교과서로 요약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항들과 제6차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 작품 목록을 작성하고 외국 교과서의 본문 구성 체제 등을 참고하여 원고 발주를 위해 차례와 레이아웃을 작성하여 저자와 첫 미팅을 갖게 되었다.

대표 저자는 대학 교수님이셨고, 또 한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두 분이 절친한 친구 사이였기에 팀워크

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 자리에서 교과서 전체 내용 전개와 콘셉트를 ‘여행’으로 정했으며, 이론 전개 부분은 교수, 활동 부분은 교사가 각각 집필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본문 디자인 의뢰를 위해 샘플 원고를 작성하면서 과연 다른 교과서에는 없는 우리 교과서만이 지닌 차별성을 무엇으로 할지 여러 모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론 전개를 차별화하는 것은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으며, 참신한 작품을 수록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출판사들이 공통으로 견지할 사항이므로 차별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는 평가 활동 부분인데, 이곳이야말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교과서인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활동의 유형을 찾는 가운데, 시간은 점점 흘러 저자들의 원고를 받고 검토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원고 검토를 하다 보니, 이론 전개는 실생활의 사례를 들어 지루하지 않게 진술되어 있었으나, 활동 부분은 ‘~연구해 보자.’, ‘~생각해 보자.’,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추론해 보자.’ 등과 같이 기존의 막연한 진술 방식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구체적이고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 중심의 진술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래서 샘플 원고를 작성하여 집필자에게 제시하여 여러 차례 개고를 부탁했으나 원하는 원고가 나오기에는 교사가 집필하는 활동의 양이 턱없이 많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두 명의 집필자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 추가로 집필자를 영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대표 저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두세 차례 방문에도 대표 저자는 새로운 집필자가 영입이 되면 팀워크를 해칠 수 있다며 원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두 명의 현장 교사를 새로 영입하여 활동 부분만 집필을 의뢰하게 되었다. (지면상으로는 간단하게 말했지만 새로운 집필진의 영입을 위해 기존 저자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지금도 질높은 교과서 제작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모든 출판사의 편집자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2세에게 더 나은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
 그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로 영입한 집필자에게 그동안 찾은 실생활과 밀접한 활동의 유형들, 예를 들어 ‘노랫말 작성하기, 리포터의 멘트 작성하기, 감사패의 문안 작성하기, 패러디하기, 속담이나 격언 찾기, 삼행시 짓기, 영화 팸플릿 작성하기’ 등 30여 가지를 제시하여 평가 활동의 집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도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유형을 본 집필자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평가 문제화하였기 때문에 재미있어 하겠다는 말로 우리의 노력을 칭찬해 주었다.

그렇게 하여 들어온 원고는 나에게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로 짜릿짜릿한 것이었다. 물론, 원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소소하게, 때로는 전부를 교체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9월부터 4박 5일에 걸친 저자 집중 검토 작업 세 번, 야근과 철야를 그야말로 밥 먹듯이 한 우리 팀의 교정 열두 번, 가인쇄 두 번과 본인쇄 한 번,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모든 업무는 마감이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 중순 애지중지 키운 딸 자식 시집보내는 심정으로 검정 출원을 하였다.

‘인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적합한 말인 듯싶다.

심사 기간이 지나고 어느 출판사는 합격이네, 어느 출판사는 불합격이네, 루머가 난무한 뒤인 이듬해 1월 말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금성출판사 문학 교과서 적격’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과서, 지금 당장 또 하고 싶네요. 마약 같아요.”

▣ 새로운 도전의 시간

그로부터 7년이 지났다. 합격의 기쁨 때문에 개발할 당시의 지난(至難)했던 괴로움을 당장 또 하고 싶다고 표현했던 그 교과서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험이 더욱 쌓여서일까? 자신감보다는 겸손하고 조심스러움이 앞선다. 게다가 환경도 바뀌어 중학교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이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검정 교과서로 바뀌어 12월 5일에 검정 출원을 한다.

국어 과목은 크게 6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기·듣기·읽기·쓰기·문법·문학 등이 그것인데, 문학 교과서는 6대 영역 중에서 문학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구성 체제나 제재 선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국어 교과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섯 영역이 통합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 체제를 짜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제7차 문학 교과서를 만들면서 느끼고 행했던 사항들을 상기하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면 우리의 2세들에게 지금보다 더욱 훌륭한 교과서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

지금도 질높은 교과서 제작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모든 출판사의 편집자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2세에게 더 나은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 그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교과서 그림 작업을 하면서

글 정대영 (삽화가)

교과서를 처음 대하게 된 것은 지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과정인 1998년도이었다.

연락을 받고 대한교과서에 갔더니 나온 작가들 중에 아는 선배분들이 많았다.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반가웠다. 그리고 작업에 앞서 여러 가지 진행 과정과 방향과 조건에 대해 듣고 돌아왔다.

몇 년 전 모임에서 교과서 그림 작업을 하고 있다는 한 선배를 만났었다. 그 선배의 말이 교과서 그림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면서 ‘꿈 많던 시절 그림 하나만이 평생의 기쁨이며 자긍심이었는데’ 하며 꺾꺾대며 웃으셨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선배는 어느 큰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친구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빈약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내 표정에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 때에는 쓸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다른 작업을 더 많이 해서 보충하면 되지 뭐.’ 하며 혼잣말로 내게 대답했었다. 그 당시 나는 잡지에서부터 동화책에 이르기까지 의뢰가 오는 대로 제법 많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해 추석 때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나서 시골에 내려가게 됐을 때 친척들을 만났다. 내 또래의 삼촌뻘되는 친척이 요즘 어디 일을 주로 하고 있냐고 했다.

딱히 하나로 말하기도 어려워 그냥 초등 국어 교과서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내 어깨를 툭치며, “잘 됐네 내가 이제 지켜볼 거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방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쭐한 기분도 있었지만, 한편 속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민망하기도 했다.

그 후로 교과서 작업을 한다는 소문이 났는지 이런 저런 모임에서 교사들과 교감 선생님, 초등학교 교육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반가워해 주었다.

“이제 주시해 볼 거야!” 하는 것이었다.

그 후에 만날 때면 그들과는 자연스레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과서는 그림이 구식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하고 똑같은데, 변한 게 없어.” 하며 말하는 교사가 있었다.

사실 난 이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교과서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처음 작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려야 한다기보다 내가 그리고 있는 스타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다였다. 어떤 분은 “교과서에서는 그림이 예술만이 다가 아니지, 교육에서는 정확한 묘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라고 말했다. 그를 반히 보고 있자니 “벌의 날개가 몇 쌍인가? 국어를 배우면서도 과학 과목을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데 잘못 그려진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평소에 안다고 믿는 것이 생각으로만 알 뿐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지 모른다.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그림 제목을 ‘천고마비의 계절’로 내셨다. 그러자 아이들은 너나할것없이 가을 풍경에 큰 말을 그리는데 막상 말을 그리려니 잘 못 그리겠다고 내 책상으로 몰려왔다. 우리 어린 시절엔 말을 쉽게 볼 수 있었

다. 비록 조랑말이었지만 짐 나르는 말들이 거리에 다니고 있었다. 쉽게 아는 말의 모습이었지만 막상 그리려고 하니 눈의 위치나, 말갈기도 앞머리부터인지 귀 뒤부터인지, 앞다리와 뒷다리를 그렸는데 어쩐지 틀린 것 같든지 등의 아이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 아이들은 정확하게 말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었다.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그림은 생각의 표현을 그리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그 반대가 아닐까 싶다. ‘그림의 표현으로 학습자의 생각(이해)을 끌어 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정확히 묘사를 할 부분은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습면에서는 정확한 것을 보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매사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자료를 찾고, 인터넷을 뒤져 자료를 모으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었다.

원고를 받고부터 일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원고를 파악하고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때부터 스케치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더구나 스케치의 교정을 보는 동안 짧게는 이삼 일에서 두 주까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막연함도 있다.

그런데 어려움은 다른 것에서도 찾아왔다. 그때 다른 출판사의 작업 의뢰가 들어왔던 것이다. 지금하고 있는 일이 있어 어렵겠다고 했다. “아니, 누구는 일이 없습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것이지요.”라고 그 담당자가 말했다.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시간이 없네요.”라고 대답하자 “그 일만 일이고 우리 일은 일 아닙니까?”라며 불쾌하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어느 출판사 모임에 갔을 때 그 담당자와 담당 부장을 만났다. 음료와 다과를 함께 한 자리에서 “정작 가는 요사이 일 많아졌다고 거절도 하고, 배불렀어, 배불러.” 하며 담당 부장이 비꼬듯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비수가 아니길 바랐으나 비수였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출판사에서는 그림 청탁이 없다.

이런 말을 나에게 조언을 준 이들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나의 몫이라 생각했다. ‘좀 더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한 것인데…….’ 인간관계와 거래의 단절과 경제적 손실이었다. 조언을 주는 이들은 내가 계속 보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일깨워 주고 있었다. “저학년이나 고학년에 똑같은 스타일의 그림이 사용되었다라고요.” 하는 것이었다. 저학년에 친숙한 그림이 있고, 고학년에 선호하는 그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라 사용한 것이 아닐까요?”라고 했다. 그렇지만 구분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또 한 분은 “그림이 산만하기도 해요.”라고 한다. “간혹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 많은 요소들을 넣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라고 말해 주었으나 “아니 그게 아니라 책 한 권에 너무 많은 스타일의 그림이 나오다 보니 책을 펼치면 정신이 없어요.”라며 고개를 흔든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을 보여서 창의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는데요.”라고 말해 주자, 그건 안정감이 있어야 창의력이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이들은 산만한데 보여 주는 것까지 산만해서야 되겠냐는 것이었다.

이런 말들이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부분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조언들이 나에게 다른 그림을 할 때보다 더 많이 교과서에 마음을 쓰이게 한 것은 분명하였다.

내가 잡지사의 아트디렉터로 근무할 때 그림은 그 기사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때는 그 내용에 어울리는 작가를 섭외하려고 동분서주하며 다녔고 직접 그리기도 하였다. 그런 경력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로 습작을 계속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교과서에서 여러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물론, 편집자의 다양한 그림의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혹시나 다른 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산만한 것을 느끼지나 않았는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들의 관심으로 다른 작업보다도 더

진지하게 해야만 했다.

일을 시작하고서도 수시로 드나들며 편집자(또는 집필자)와 꽤 많이 대화를 한 것 같다. 이런 것이 자칫 번잡스럽길 수 있었지만 비교적 집필 의도가 잘 파악이 되었다.

‘교과서 그림이 따로 존재하는가?’ 라고 생각될 만큼 교과서 그림은 집필자와 그림 작가 간에 긴밀한 협력하에 그려진 그림이 되어야 한다.

가령 유년 아이들은 사물의 테두리가 짙은 그림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한다. 연령과 학년에 따른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술성이나 예쁘게만 그려진 그림보다는 학습성이 유발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좋은 그림 이면서도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림은 있다. 그림책에서 있었던 일로 ‘빨간 모자’에 나오는 늑대까지도 귀엽고 예쁘게 그려 본래의 의도인 악역을 벗어나는 그림이 있었다. 글을 읽으면서 나쁜 늑대였는데 조금도 나쁘게 느끼지 못하고 읽혔다. 눈으로 보고 있는 그림에서 느낀 감정이 늑대의 역할을 희석해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내용에 충실했다면 글이 아닌 그림만으로도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까지도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교과서에서도 내용을 잘 이해하게끔 필자의 집필 의도를 작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해야 한다. 초등학생은 저학년과 고학년, 학년마다 어린이들의 성장은 몸만큼 생각도 커간다. 그러기에 이들의 관심은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학년의 학습에 맞는 그림이 있을 것이고,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이는 교과서는 개인적으로 선택되어지는 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연령이 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선호하는 그림, 심미적인 그림, 오래 기억하는 그림, 창의력을 줄 수 있는 그림이어야 하며, 따라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는 개인 작가에게만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또, 작업에 있어 시간과 화료에 대한 적절한 확보가 되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라고 하겠지만 당연하지 못

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 시간에 쫓기면 충분한 표현이 생략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잘 그리는 작가들이 간혹 있으나 이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집필 의도도 충분히 설명 받아야 한다. 시간에 쫓기듯 들어갈 그림 설명만 간단히 듣고 보면 난감할 때가 생긴다. 그림에는 글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 표현되기 때문에 요구받은 그림 설명보다 의도가 중요하다. 어느 때 필요 이상의 여러 요소를 요구받아 그려 놓고 집필 의도가 반영되지 못해 수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집필 의도를 설명 받아야 한다.

화료도 적으면 어느 일정량의 수입을 위해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이런 일을 초월한 작가를 은근히 바라지 말아야 한다. 청탁을 하는 것은 일할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므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좋은 교과서가 나오려면 집필 따로, 편집 따로, 그림 따로가 아니다.

거듭 말하게 되는 것이지만, 작업하는 모든 이들이 먼저 마음부터 열고 함께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에 꾸준히 함께 작업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작업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은 “데생에서 시작하여 데생으로 마무리된다.”라는 말이 있다. 가장 농익은 작가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잘한다는 말일 것이다.

어느 면으로는 가장 교육의 기초가 되는 초등 교과서의 내용을 가장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이들은 오랜 경험을 쌓은 작가들이 아닐까? 창작을 하는 작가는 절대 어제의 작가가 오늘의 작가가 아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깊어지는 작품을 내놓는 새로운 작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작가들이 참여하여 교과서에서 그의 능력을 십분 발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연**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25)

윤진영

-대학서림 회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출판사인 대학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대학서림은 생물과 한문 교과를 비롯하여 여러 교과와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로, 보건 의료 분야의 전문 서적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출판사입니다. 대학서림의 윤진영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장님. 출판사가 아담하네요.

예 그렇지요. 이곳은 누가 뭐래도 명당 자리입니다. 주변이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나지요.

☞ 명당이라니요? 풍수를 하시나요?

예 조금은 알지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설계로 지은 사옥입니다.

☞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아늑하고 편안한 출판사에서 일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겠네요. 먼저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우리 회사는 1956년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 윤익호 전임 회장님이 설립하였습니다. 전임 회장님은 의료 보건 분야의 지식 보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분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출판사를 설립한 거지요. 1965년부터 제가 회사를 맡아 경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문 학문 분야의 지식 보급을 목표로 하였지만, 좀 더 독자 대중에게 다가가는 양서를 내고 싶은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 아 그렇군요.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출판사라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경영 방침도 아울러 소개해 주시죠.

우리 회사의 설립 이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문 분야 및 교양 분야의 양서를 선정하여 출판하는 일, 둘째는 훌륭한 필자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 셋째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가치 있는 지식을 보급하는 일, 넷째는 사원을 가족처럼 여기고 각 분과의 전문 지식을 충실히 익혀 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우리 회사와 인연을 맺은 분들이나 직원 분들은 늘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사실 최근의 출판계 현실을 보면 암담한 일들이 많던데요. 특히, 편집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매우 짧고 이직률이 높아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출판계가 영세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소규모 출판사일수록 이직률이 높고, 그렇다 보니 전문 지식을 익히기도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출판사는 처음 입사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일해 주시는 직원들 덕분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지요.

☞ 지금까지 출판하신 책이 모두 몇 종이나 됩니까?

500종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량은 데이터를 보아야 하겠지만, 그 정도는 넘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 그 많은 종수가 모두 의료 보건 분야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량은 의료 보건 분야이지만, 최근에는 교양 서적도 관심 있게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출판사의 뿌리가 의료 보건 분야이므로, 이 분야의 지식 보급은 우리 회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료 보건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책 이름을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초 보건학>, <임상 병리학>, <물리 치료학>, <방사선학>, <치기 공학>, <안경 공학>, <환경학>, <응급 구조학>, <피부 미용학>, <병원 경영학>, <한방 신경학> 등의 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분야도 매우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분야이지요.

☞ 아, 여기 <구조구급용어사전>이 있네요. 이 사전은 무엇입니까?

아, 그 책이요. 참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서강정 보대학에 계시는 박희진 교수님과 현재 소방방재청 청장님도 경기소방학교 재직 시 직접 참여하시고,

국립의료원 황정연 박사님 외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20년 넘게 작업해 온 결과일 겁니다. 이 분야의 전문 용어 사전으로는 매우 희귀하고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되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 전문 용어 사전 편찬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은 어떤 종류이든 모두 같다고 생각돼요. 저자의 입장에서는 용어를 선정하고, 그것을 풀이하며, 용례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출판사의 입장에서 편집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박희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 집필진이 보통 열성적인 게 아니거든요. 집필 과정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편집과 교정 과정만 해도 수십 번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진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국어학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께 감수를 받기도 하였답니다.

☞ 그렇군요. 아마도 출판일을 해 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특히, 출판이 전문화되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많아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때마다 무엇인가 이루어 냈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지요.

☞ 교과서 출판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7차 교육과정이 발표될 시점에, 전문 지식에 대한 관심은 학생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이공계의 위기니 자연 과학의 위기니 하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당시에 어떤 분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더군요. 이공계 위기를 타령하기 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 보급이 무엇보



훌륭한 필자의 발굴과 지식 보급은 출판사의 사명이지요.
출판 문화가 발전하려면 출판사의 전문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역사,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가치 있는 책을 내고 싶습니다.



다 중요하다고요. 그 분들 가운데 몇 분은 아예 교과서 작업을 권유하기도 했답니다.

☞ 교과서 출판은 어렵지 않나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교과서 출판을 기획하는 과정, 집필진 섭외, 집필 과정, 편집과 제작 과정,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판사에서 하는 일이 편집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 원고 집필 과정부터 교열, 인쇄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므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은 셈이지요. 더욱이 교과서 개발은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제도에 따라 회사에서 대처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교과서 분야라면 새로운 출발이나 다름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한문>과 <생물>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교과서 정책이나 교과서 개발 과정에 따른 노하우가 제법 축적되어 가는 입장입니다.

☞ 개정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는데, 두 교과 이외에도 새로운 교과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국어>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출판을 하면서 느낀 일이지만, 이공계의 글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전문 지식을 중시하다 보니 우리말과 우리글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어 교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요.

☞ 진행하시는 분야를 여쭙어도 되겠습니까?

현재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국어>와 심화 과정인 <독서>, <작문>, <화법>, 그리고 <한문>, <일본어>, <생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과 관련 교과서 개발은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질 높은 교과서의 개발은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 아, 그렇군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 교양 서적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훌륭한 필자의 발굴과 지식 보급은 출판사의 사명이지요. 출판 문화가 발전하려면 출판사의 전문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회사는 이제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역사,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가치 있는 책을 내고 싶습니다. 번역자를 발굴하는 작업도 중요하겠지요.

❖ 출판사와 독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자 없는 출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서 우리 회사를 독자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 출판사에서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독후감 모집이나 저자와의 대화 등의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그런 행사가 독자를 위해 어느 정도 봉사를 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가 않아요. 그보다는 좀 더 질적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비스 차원의 기초 자료조차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조만간 양서 보급과 홈페이지 활용과 같은 기초 서비스를 제외한 별도의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출판사는 출판 문화 향상을 위해 네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 서적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편집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여 전문 서적에서 발견되기 쉬운 가독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교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과서 개발과 출판이 중심이 되겠지만, 대학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찾고자 합니다. 교재 개발이나 학회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는 독자와의 소통 통로를 좀 더 넓히는 일입니다. 홈페이지를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독서 광장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출판 문화의 질적 향상입니다. 편집이 좀 더 전문화되어야 하며, 교열 문화가 발달해야 합니다. 특히, 교열 분야는 우리나라 출판계의 고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출판물을 낼 수 있도록 교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

〈대학서림을 찾아가는 길〉

대학서림은 혜화동 로터리에서 서울과학고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쪽의 우체국 맞은 편에 있다. 4층의 아담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에는 편집부, 교열부, 연구부, 영업부가 함께 있다. 대학서림에서 발행하는 책은 홈페이지(daihaks.com)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고, 국어학 전문 연구 학회인 '한말연구학회'와 연계하여 사전의 활용도를 높였다.

■ **대답** / 김종일(한국교과서연구재단 조사연구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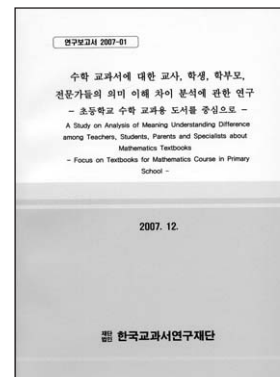
2007년도 연구 보고서 소개

수학 교과서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미이해 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수학 교과용 도서를 중심으로 —

〈연구 보고서 2007-1〉

이 연구는 2006년 수학 교과에 대한 개정 교육과정의 이념에 부합되는 수학 교과서의 단점과 장점 및 개발 방향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미 이해 차이를 규명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좋은 교과서에 대한 의미 이해 차이를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새로운 수학 교과서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각 교육 수요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좋은 수학 교과서의 개발을 위한 방향과 지원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연구 개발에 기초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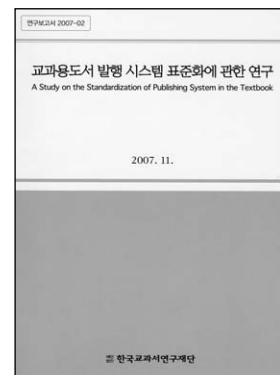


● … 이 연구는 한양대학교 권성호 님, 강경희 님, 오현숙 님, 교육과학기술부 금융한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교과용 도서 발행 시스템 표준화에 관한 연구

〈연구 보고서 2007-2〉

이 연구는 교과서의 기획, 편집, 디자인, 제판, 인쇄, 공급, 유통 등 부문별 발행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 발행 시스템을 표준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교과서 발행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과서 발행 출판사에 대한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 시스템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행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교과서 발행 시스템의 선진화 및 전문화를 이룩하는 데 공헌하고 각 출판사의 교과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 이 연구는 동원대학 금창연 님, 부길만 님, 일본 상지단기대 채성혜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연구 보고서」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www.ktrf.re.kr)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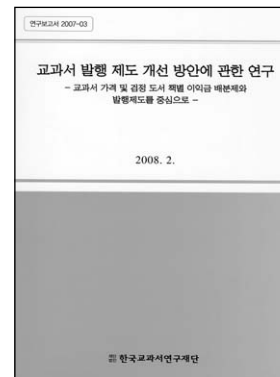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교과서 가격 및 검정 도서 책별 이익금 배분제와 발행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 2007-3〉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시범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서부터 교과서 제도 중 우리가 택하고 있는 국정, 검정, 인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탐색과 교과서 가격 및 검정 도서 책별 이익금 배분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교과서 연구 개발비의 개선과 인쇄 제본 공급 비용의 개선, 검정 이익금 배분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국정, 검정, 인정 제도의 개선 방향이 제시되어 궁극적으로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홍후조 님, 백경선 님, 김대영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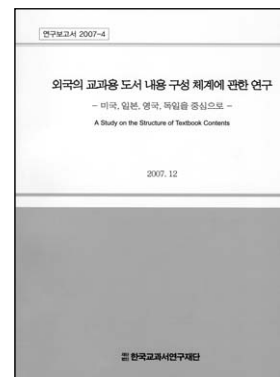
외국의 교과용 도서 내용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 2007-4〉

이 연구는 선진 주요 국가의 교과서 편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초·중등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국어과, 수학과, 과학과, 사회과 교과서의 구성 체계와 내용 전달을 위한 방법 및 각 교과목의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선진 주요국 교과서 편찬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교과서 내용 구성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또한 기대한다. 우리나라 교과서 내용 구성 및 편찬상의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는 데 활용되고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 이 연구는 백석대학교 이정기 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영근 님, 교육과학기술부 김진규 님, 부산장신대학교 고원석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연구재단 소식

※ 임원 동정

- ...심은석 이사, 김동원 감사 퇴임
 - 우리 연구재단의 당연직 임원 중 심은석 이사(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관)는 2008년 3월 12일자로, 김동원 감사(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기획과장)는 2008년 3월 7일자로 타부서로 전출하심에 따라 퇴임하였습니다. 그 동안 이사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김홍섭 이사, 민병관 감사 취임
 - 정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에 부임한 김홍섭 국장은 2008년 3월 12일자로 우리 연구재단 당연직 이사에, 교과서선진화팀장에 부임한 민병관 팀장은 2008년 3월 7일자로 우리 연구재단 당연직 감사에 각각 취임하였습니다.

※ 상반기 '교과서 출판교실' 운영

- ...우리 연구재단은 2008년도 상반기 '교과서 출판교실' 운영을 교과서 편집자 등 교과서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황리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출판교실은 5, 6월 중 주별로 한 과정(3일 19시간)씩 5회 운영하여 총 16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강의를 맡아 주신 강사님과 출판교실에 참가해 주신 수강자 여러분

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교과서 출판교실' 운영 계획은 홈페이지(www.ktrf.re.kr)에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제6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접수 마감

- ...우리 연구재단의 '제6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접수가 2008년 5월 15일부터 2008년 7월 15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접수한 응모 작품은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당선작은 2008년 9월 18일(목)에 우리 연구재단 홈페이지(www.ktrf.re.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부설 '교과서정보관' 운영 활성화

- ...우리 연구재단 부설 '교과서정보관'은 우리나라 교과서는 물론 미국 등 25개국의 교과서를 소장하고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거나 교과서 관련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과서 전문 도서관 겸 박물관입니다. 최근 새로운 교과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이용자들의 방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과서정보관 이용은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2:00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은 휴

관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실 경우 우리 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자료를 미리 검색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재단 건물 임대 추진 확대

○…우리 연구재단은 기금의 수익 증대를 위해

수익용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건물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6-9번지 소재 5층(2,546.1㎡)의 건물로서, 지하철 논현역(7호선)에 인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아 업무 시설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기업체의 사옥 또는 사무실이 필요한 분은 우리 재단으로 문의(02-2651-1950)하시기 바랍니다.

알립니다

고(古)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재단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으로 고(古) 교과용 도서를 수집합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는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교과서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사적 자료로 소중히 보존하겠습니다.

- 대 상 : 전 교과용 도서(교과서, 인정 교과서, 지도서, 참고서, CD, 테이프 등)
- 수 량 : 제한 없음.
- 기 간 : 수시 접수
- 보 상 : 기증자에게는 '기증서' 교부와 아울러 명단을 영구히 보존하고, 실비 보상도 할 수 있음.
- 연락처 : (우) 158-86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8-2 세원빌딩 4층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담당자 앞
Tel : (02) 2651-1950(대), Fax : (02) 2651-1954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 과 서 별 구 입 처

교과서			발행사	전화 번호
국정 교과서	초등학교	○ 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대한교과서	(02)3475-3800
		○ 영어(CD, TAPE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수학, 사회, 실과(1, 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생활의 길잡이, 즐거운 생활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생활의 길잡이 3~6학년 포함)	지학사	(02)330-5302
		○ 과학(실험 관찰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예 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학사	(02)7075-120
	중학교	○ 국어 1, 2학년, 국사, 특별 활동 지도 자료	두산동아	(02)3670-5109
		○ 국어 3학년(생활 국어 포함)	대한교과서	(02)3475-3800
		○ 생활 외국어	천재교육	(02)3282-2851
		○ 도덕	지학사	(02)330-5302
	고등 학교	○ 국어, 문법, 국사, 공업계, 수산계, 상업계 가사 실업계(이산 수학, 해양 과학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공업계, 수산 해운계, 가사 실업계 일부	대한교과서	(02)3475-3800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농업계 일부	지학사	(02)330-5302
		○ 과학계, 외국어계(아랍어1, 확률과 통계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과학계, 외국어계(아랍어2, 생활과 과학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체육계, 농업계, 상업계 일부	교학사	(02)7075-120
검정 교과서		위 교과서 이외의 모든 교과서	(사)한국검정교과서	(02)2657-3540~4

| 서 울 지 역 직 매 장

- (주)두산 직매장 - 모든 국 검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 연강빌딩 2층 ☎ 02-3670-5106
 - 지하철 : 1호선 종로5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모든 국 검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 02-323-4682~3
 - 지하철 :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마포구청 방향 30m 지점(인디안모드 2층)

「교과서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 여 분 야 _ 〈현장 교육〉, 〈논단〉, 〈단상〉, 〈나의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 활동,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 | | |
|---------|---------------------------------|
|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기준(A4, 10포인트 3.5매) |
| · 원고 제출 | 수시 접수 |
| ·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 보내실 곳 | E-mail 접수 (editor@ktrf.re.kr) |
| · 기타 문의 | 전화 (02) 2651-1950 연구지 담당자 앞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주소(D) http://www.ktrf.re.kr/ 이동

HOME CONTACT US SITEMAP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재단소개 교과서연구 교과서정보관 출판교실 알림마당 참여마당

교과서정보관 이용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0 2 . 2 6 5 1 . 1 9 5 0

● 전철_전철 5호선 신정역, 2호선 신정 네거리역 각 3번 출구
● 버스_603, 5012, 6614, 6624, 6640번

| 운영 개요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28,637	6,553	35,190
일반 자료	2,682	-	2,682
계	31,319	6,553	37,872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베트남,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란,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교과서 보유

| 열람 시간

구 분	시 간
평 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 12:00
공휴일	휴관